



KIEP 기초자료  
26-02

2026년 4월 29일

# 미국 자국우선주의 역사와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박은빈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ebpark@kiep.go.kr, 044-414-1046)

# 미국 자국우선주의 역사와 주요국의 대응 사례

## 요약

### ▶ 미국 자국우선주의는 건국 초기부터 반복되어 온 역사적 패턴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건국 초기의 고립주의·보호무역주의에서 「스무트-홀리관세법」(1930), 닉슨 쇼크(1971), 플라자 합의(1985) 등 경제 위기 때마다 반복되어 온 역사적 패턴임.
- 미국은 독립 직후부터 「관세법」(1789)·해밀턴의 제조업 보고서(1791)를 통해 보호관세와 국내 산업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였고, 먼로독트린(1823)으로 고립주의적 외교 원칙을 확립

### ▶ 미국 자국우선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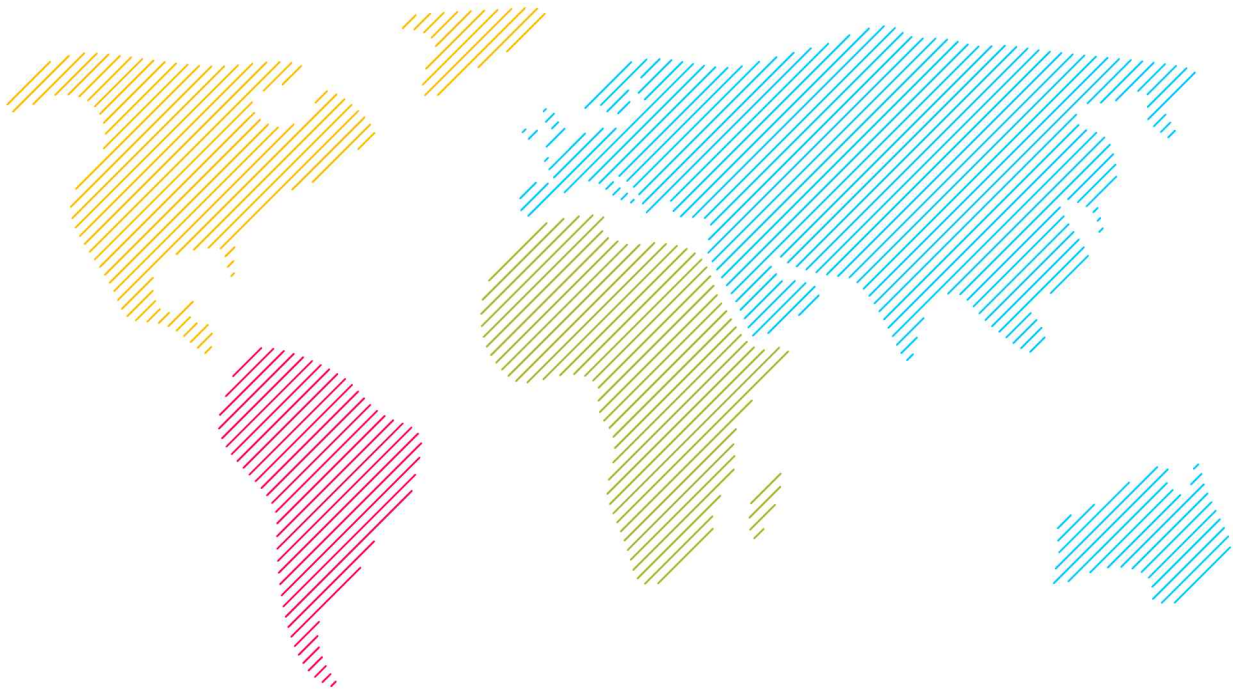
- 19세기에 「모릴관세법」(1861), 「맥킨리관세법」(1890) 등의 고율 보호관세로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과잉생산 문제가 심화되자 루스벨트 코럴러리(1904)로 서반구 개입을 정당화하는 등 제국주의적 정책을 추진하였고, 대공황기 「스무트-홀리관세법」으로 보호무역이 정점에 달함.
-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던 미국은 1960~70년대 무역적자 확대와 달러 위기가 심화되면서 닉슨 쇼크·1974년 「무역법」 제정 등 자국우선주의가 재부상하였고,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적 보호주의로 이어짐.
- 이후 차이나 쇼크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와 초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TPP 비준이 실패하는 등 자유무역 지지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트럼프 1기 'America First' 공식화와 바이든 행정부의 CHIPS 법·IRA 제정을 거치며 자국우선주의는 초당적 기조로 자리 잡음.

### ▶ 미국 자국우선주의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은 시기별·국별로 차별화

- 1930년대 「스무트-홀리관세법」에 대해 주요 교역국들은 보복관세와 경제 블록화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세계 무역량이 급감하며 대공황을 심화시킴.
- 1970~80년대 통상압력에 직면한 일본은 자발적 수출규제(VER) 수용,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산업 고도화,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무역 마찰을 관리하였으나, 플라자 합의 수용 이후 엔화 급등과 저금리 정책이 자산 버블로 이어져 1990년대 장기침체의 원인이 됨.
- 1990년대 중국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 기조하에 대외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FDI 유치와 WTO 가입을 성장전략으로 활용하여 경제 굴기의 기반을 다졌으나, 시장 왜곡적 관행을 지속하였다는 교역국들의 이견이 존재함.
- 트럼프 1·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각국은 즉각적 보복(중국·캐나다), 협상을 통한 조건부 수용(EU·일본 등), 실용적 중립(멕시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함.

### ▶ 트럼프 2기 자국우선주의는 역사적 패턴을 공유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만의 차별성을 보이며,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내포

- 미국의 역사적 자국우선주의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간에는 경제위기 시 보호무역 재부상·행정권을 통한 의회 우회·산업 이익집단의 압력이라는 유사점이 있으나, WTO 체제로부터의 명시적 이탈·안보·무역·국경정책의 통합·관세의 FDI 유치 수단화 등에서 전혀 없는 차별성을 보임.
- 트럼프 2기 자국우선주의의 정책은 대중 견제·제조업 리쇼어링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 공고화와 주요국으로부터의 대미 투자 확약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관세정책의 법적 불확실성 노출·동맹 신뢰 저해·소비자 비용 증가·합의 이행의 불확실성 등의 한계를 동시에 내포함.
- 트럼프 2기의 자국우선주의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새로운 전환점인지 일시적 이탈인지는 향후 USMCA 재검토·미중 무역 협상·WTO 재건 여부 등이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차 례

1. 배경
  2. 미국 자국우선주의의 역사
  3. 주요국의 대응 사례
  4. 평가
- 참고문헌

## 1. 배경

■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우선주의를 핵심 정책 기조로 삼으며 국제경제 질서와 안보 체계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sup>1)</sup>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발동하여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펜타닐 관세 부과
- 2025년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며 IEEPA를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등 대규모 관세 조치 발표
  -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헌 판결(2026. 2. 20.)로 무효화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전 세계 관세(150일 한시)를 발동하고, 중국·EU·인도·멕시코·일본·한국·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의 산업보조금, 과잉생산, 강제노동 등의 문제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는 등 자국우선주의적 관세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변화는 무역뿐만 아니라 산업, 이민, 안보, 외교 분야를 아우르며 기존 국제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타난 자국우선주의의 기조는 전례 없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미국 건국 초기의 고립주의, 19세기의 보호무역주의, 1~2차 세계대전 시기의 중립주의, 1970~80년대 무역적자로 인한 보호주의 등 국가 위기 때마다 반복되어 온 역사적 패턴임을 알 수 있음.

- 독립 이후 신생국이었던 미국은 유럽 열강의 중상주의 질서에 맞서기 위해서 보호관세와 국내 산업육성 정책을 채택할 것을 강조하며 건국 초기부터 보호무역 기조를 확립함.
- 이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경제적 위기마다 재부상했는데, 주요 사례로는 대공황기의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을 통한 보호관세 부과, 무역적자 위기로 인한 닉슨 쇼크(1971)의 수입 과징금 부과 및 불공정 무역에 대한 301조 도입(1974), 쌍둥이 적자와 강달러 심화에 대응한 플라자 합의(1985) 주도 등이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는 약 80년간 국제 규범과 다자 협력 체제라는 틀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확대된 시기로 이해할 수 있음.
- 21세기 들어 세계화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차이나 쇼크(China Shock)로 인한 미국 제조업 공동화로 미국 지역경제 전반이 쇠퇴하면서, 자국우선주의의 기조가 점진적으로 심화됨.<sup>2)</sup>

■ 본 연구는 미국 자국우선주의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전개 양상, 과거 교역국들의 대응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의 기조를 역사적 정책들과 비교하고 평가하고자 함.

1) 본고에서 자국우선주의는 자국의 경제적, 산업적, 안보적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무역, 일방주의적 수단을 활용하는 대외정책 기조로 정의.

2) Autor, Dorn, and Hanson(2016), "The China shock: Learning from labor market adjustment to large changes in trade."

## 2. 미국 자국우선주의의 역사

### 가. 건국 초기의 보호무역주의와 먼로독트린

■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신생 독립국으로서 유럽 열강의 경제적 연속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건국 초기부터 시작됨.<sup>3)</sup>

- 1789년에 제정된 미국 최초의 「관세법(Tariff of 1789)」은 관세를 단순한 세입원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을 육성하고 유럽의 상업적 공세로부터 국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여김.<sup>4)</sup>
  - 미국은 독립 당시 관세가 주요 재정 수입원(90% 이상)이었으며 새로 독립된 연방정부의 재정을 확보하고 독립 전쟁 부채를 상환하는 데 기여<sup>5)</sup>
  - 당시 하원의원으로 법안을 발의했던 제임스 메디슨(James Madison)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5%의 종가세를 부과하고, 철강, 선박, 밧줄, 담배, 소금, 천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품목별 차등 관세 적용하고, 외국선박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와 자국 해운업을 보호함.
-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1791년 발표한 ‘제조업 보고서(Report on the Subject of Manufactures)’에서 신생국인 미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관세정책과 산업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건국 초기 미국의 산업정책의 핵심 기조로 확립됨.<sup>6)</sup>

■ 신생국이었던 미국은 보호관세를 통한 경제적 자립과 함께 안보적 자립을 추구했으며, 이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영구동맹 회피 권고와 제임스 먼로(James Monroe) 대통령의 상호 불간섭 원칙에서 전략적 고립주의의 형태로 나타남.<sup>7)</sup>

- 워싱턴 대통령은 고별사를 통해 유럽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영구적인 동맹’을 피할 것을 권고하며 중립주의와 고립주의 형태의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강조함.<sup>8)</sup>
  - 당시 미국의 중립 정책은 신생국으로서의 소극적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대서양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력을 축적하고 신대륙의 독자적 세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음.<sup>9)</sup>
  -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대통령도 1812년 전쟁 당시 영국 봉쇄로 물자 부족을 경험하면서 외세에 대한 공업적 의존이 국가의 주권을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sup>10)</sup>
  - 실제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일본의 진주만 공격 전까지 중립을 택하며 다른 국가와의 동맹을 회피해옴.

3) 강구상 외(2025),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기조 전망」, 26-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Irwin(2017), *Clashing over Commerce: A History of US Trade Policy*.

5) “History of U.S. Tariffs and Why It Matters Today”(2025. 5. 15.), (검색일: 2026. 3. 24.).

6) Hamilton(1791), *Report on Manufactures*. In *The Papers of Alexander Hamilton*, edited by Harold C. Syrett, Vol. 10.

7)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0. 10. 29.), “Teaching Notes for Isolationism”(검색일: 2026. 3. 24.).

8) Office of the Historian, U.S.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s Farewell Address”(검색일: 2026. 3. 24.).

9) The Heritage Foundation(2010. 10. 15.), “America’s Founders and the Principles of Foreign Policy: Sovereign Independence, National Interests, and the Cause of Liberty in the World”(검색일: 2026. 3. 24.).

10) Irwin(2017).

-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1823년 12월 2일 연례 국정연설에서 선포한 ‘먼로독트린(Monroe Doctrine)’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식민지 건설을 반대하고, 미국 또한 유럽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상호 불간섭 원칙을 포함함.<sup>11)</sup>
  - 먼로독트린은 자국의 직접적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한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 잡음.
  - 이후 1904년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먼로독트린을 확장·수정한 ‘루스벨트 코롤러리(Roosevelt Corollary)’를 선언하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채무 불이행과 이에 따른 유럽 열강들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빌미로 미국이 서반구에서의 ‘국제 경찰력’ 행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방적 개입주의의 토대 마련<sup>12)</sup>

## 나. 19~20세기 초반

### 1) 19세기 보호무역주의 강화

■ 해밀턴의 보호무역 사상은 19세기 전반 상원의원·하원의장·국무장관을 역임한 헨리 클레이(Henry Clay)의 아메리칸 시스템(American System)으로 계승·발전됨.

- 클레이 하원의장은 1824년 의회 연설에서 처음 이 명칭을 사용하며 △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고율 보호관세, △ 상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은행, △ 도로·운하 등 내부 개선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의 세 축으로 구성된 국가 주도 경제발전을 모델로 제시함.
- 아메리칸 시스템은 클레이 상원의원이 주도한 휘그당(Whig Party)의 핵심 강령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후 휘그당을 계승한 공화당이 이 노선을 이어받아 링컨(Abraham Lincoln) 행정부의 산업 보호정책으로 구체화됨.<sup>13)</sup>
  - 휘그당은 공화당의 전신으로 연방주의당, 국가공화당, 휘그당, 공화당으로 이어지는 계보에서, 보호관세와 국가 주도 산업육성이라는 핵심 경제사상이 일관되게 계승됨.

■ 적극적 국가 개입 사상이 반영된 초기 보호무역주의는 남북전쟁(1861~65년) 전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하는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해 나감.<sup>14)</sup>

- 미국 내 남북 갈등이 고조되면서 자유무역을 선호하던 남부 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했는데, 이때 제조업 보호와 보호관세를 지지하던 북부 주가 의회를 장악하면서 1861년 3월 2일 「모릴 관세법(Morrill Tariff Act)」을 통과시켜 관세율을 대폭 인상함.
  - 19세기 중반 미국은 노예제만큼은 아니지만 관세 문제도 남북 갈등 요인 중 하나였음.<sup>15)</sup>
  - 북부는 제조업·공업 중심 지역으로 유럽산 공산품 차단을 위한 보호관세를 지지했고, 남부는 면화 중심 농업 지

11) National Archives(2022. 5. 10.), “Monroe Doctrine (1823)”(검색일: 2026. 3. 24.).

12) National Archives(2022. 2. 8.), “Theodore Roosevelt’s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 (1905)”(검색일: 2026. 3. 24.).

13) U.S. Senate(1832. 2. 2.), “Classic Senate speeches: Henry Clay, ‘In Defense of the American System’”(검색일: 2026. 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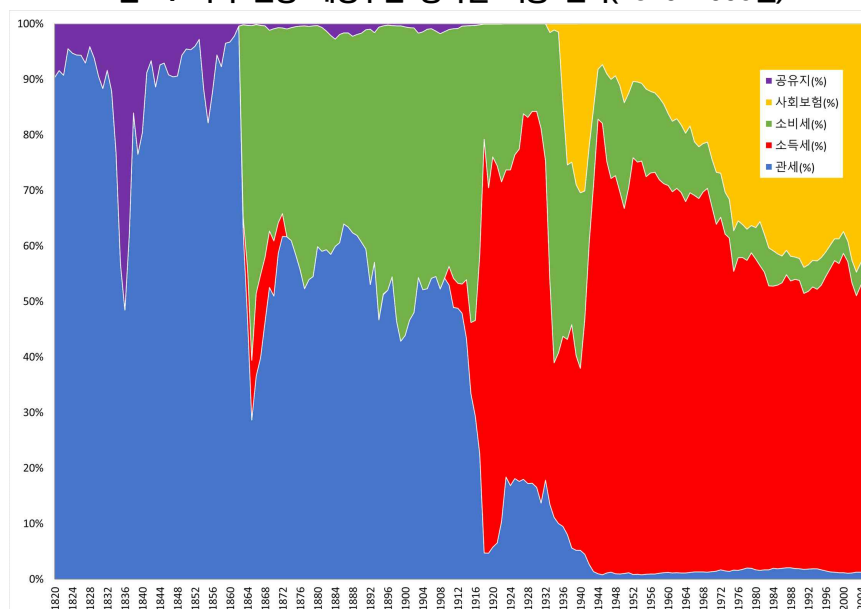
14) Irwin(2017); 강구상 외(2025).

15) Edward(2002), “The Tariff Debates of 1841 and 1842.”

역으로 영국과 프랑스와의 자유무역을 선호

- 「모릴 관세법」은 특히 철강, 섬유, 기계류 등 공산품 보호를 강화했으며, 이러한 보호관세를 통해 유럽 제품의 경쟁력 약화, 미국 내 제조업 성장 촉진을 가속하여 남북전쟁 이후 세계 최대 공업국으로 도약하는 토대 형성<sup>16)</sup>
- 남북전쟁 속에서도 관세는 연방정부의 주요 세입원이었고, 남북전쟁 발발이 임박한 상황에서 「모릴 관세법」은 전쟁으로 인해 급증한 정부 부채를 감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sup>17)</sup>

그림 1. 미국 연방 재정수입 항목별 비중 변화(1820~2005년)



자료: 강구상 외(2025), p. 35; Hungerford(2006. 9. 25.), "U.S. Federal Government Revenues: 1790 to the Present," pp. 12-18.

■ 19세기 공화당이 주도한 산업육성 중심 정책은 고율 관세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20세기 대공황 초반까지 지속됨.<sup>18)</sup>

- 1890년 당시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위원장이었던 윌리엄 맥킨리(William McKinley)의 주도하에 제정된 「맥킨리 관세법(McKinley Tariff Act)」은 설탕, 커피, 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를 적용했으나 철강, 섬유, 기계 등 제조업 보호 강화를 위해 평균 관세율을 약 48%로 인상함.<sup>19)</sup>
  - 「맥킨리 관세법」은 교역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대해 불평등하고 불합리한(unequal and unreasonable) 관세를 부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됨.
  - 당시 공화당 보호주의자들은 관세를 통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관세법을 통과시켰으나,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으로 189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함.
- 이후 민주당 주도의 「윌슨-고먼 관세법(Wilson-Gorman Tariff Act, 1894)」에서 관세율을 부분적으로 낮추

16) "History of U.S. Tariffs and Why It Matters Today"(2025. 5. 15.), (검색일: 2026. 3. 24.).

17)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2024. 9.), "Customs Duties: What Do They Amount To?"(검색일: 2026. 3. 24.).

18) Irwin(2017).

19) Irwin(2017); Reitano(1994), *The Tariff Question in the Gilded Age: The Great Debate of 1888*.

였으나, 보호관세파 상원의 개입으로 당초 계획보다 인하 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기대보다는 물가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됨.<sup>20)</sup>

- 1896년 대선에서 승리한 맥킨리 대통령(재임 1897~1901년)은 임기 직후인 1897년에 「딩글리 관세법 (Dingley Tariff Act)」을 제정하여 평균 관세율을 「맥킨리 관세법」 수준으로 다시 올림.<sup>21)</sup>

## 2) 미국식 제국주의 등장

■ 보호무역정책으로 육성된 미국의 생산 능력이 국내 소비 능력을 초과하면서 과잉생산 문제가 심화되었고, 이는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대두시켰음.<sup>22)</sup>

- 이러한 경제적 압력은 미국 외교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초래했으며, 미국은 건국 이래 유지해 온 고립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영토 확장으로 선회함.
- 1898년 미국은 미국-스페인 전쟁(Spanish-American War)을 시작으로 해외시장 확장을 본격화했는데, 전쟁 승리 후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 등의 영토를 획득함.
  - 이를 통해 태평양과 카리브해 지역에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대폭 확대하며 제국주의적 팽창기를 거침.<sup>23)</sup>

■ 미국의 제국주의는 정치적 주권 확보보다는 경제적 접근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시장 접근권, 관세 통제권, 금융 지배력을 핵심 목표로 설정함.<sup>24)</sup>

- 19세기 후반 미국은 태평양 해양 전략의 일환으로 하와이와의 경제적 연계 강화와 군사적 거점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1898년 공식 병합을 단행함.<sup>25)</sup>
  - 미국은 1875년 미·하와이 상호통상조약(Reciprocity Treaty)을 통해 하와이산 설탕의 대미 무관세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양측 간 경제적 상호 의존을 심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하와이의 주요 산업인 사탕수수 플랜테이션(plantation)을 운영하던 미국계 농장주·투자자들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점차 확대됨.
  - 이를 기반으로 1887년 진주만 해군기지 사용권을 확보하였으며, 1893년 쿠데타로 하와이 왕정이 붕괴되고 친미 성향의 임시정부와 공화국이 수립됨.
  - 이 과정에서 미국계 플랜테이션 세력의 경제적 이해와 미국정부의 전략적 필요가 결합되어 1898년 미국 의회의 뉴랜드스 결의(Newlands Resolution)를 통해 하와이가 미국 영토로 편입
- 맥킨리 행정부는 러시아·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 열강들이 중국 내 세력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국 통상 접근권이 봉쇄될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며, 산업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던 미국기업들이 중국

20) 「월슨-고먼 관세법」은 관세 인하 조항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연방 소득세 조항을 포함시켰으나, 대법원 판결로 무산되었으며 전사가 아닌 평시에 연방 소득세를 도입하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였음.

21) Taussig(1931).

22) LaFeber(1963), *The New Empire: An Interpretation of American Expansion, 1860-1898*.

23) Zimmermann(2002), *First Great Triumph: How Five Americans Made Their Country a World Power*.

24) 이러한 접근법은 비공식 제국주의(informal imperialism) 또는 개방적 제국주의(open door imperialism)로 개념화되며, 20세기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 틀 형성. Rosenberg(1982), *Spreading the American Dream: American Economic and Cultural Expansion, 1890-1945*.

25) National Archives(1898. 7. 7.), "Joint Resolution to Provide for Annexing the Hawaiian Islands to the United States"(검색일: 2026. 3. 24.).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 1899)을 추진함.<sup>26)</sup>

- 문호개방정책은 동등한 시장 접근권 보장, 중국의 관세 주권 유지, 열강이 자국 선박에 항만세 및 철도운임 특혜 부여 금지 등에 대한 원칙을 담은 외교 각서를 발송하여 원칙 준수를 촉구
- 중남미에서는 군사적 개입보다 ‘달러 외교(Dollar Diplomacy)’를 활용하여 금융 대출, 투자 유치, 관세 및 재정 통제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함.<sup>27)</sup>
  -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관세 징수권과 재정 운영권을 장악
  - 특히 도미니카공화국(1905년), 니카라과(1911년), 아이티(1915년) 등에서는 미국이 관세청을 직접 운영하거나 재정 고문을 파견하여 실질적인 경제 주권을 행사<sup>28)</sup>
  - 미국은 1903년 파나마의 독립을 지원한 직후 ‘헤이-부나우-바리야 조약(Hay-Bunau-Varilla Treaty)’을 통해 파나마 운하 건설권과 운하 지대에 대한 영구적 통제권을 확보<sup>29)</sup>
  - 이러한 종속 구조는 정치적 독립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예측되는 결과를 초래
- 미국의 서반구 헤게모니는 ‘루스벨트 코롤러리’를 통해 정당화되었는데, 이는 중남미 국가의 무질서·채무 불이행 시 미국의 선제적 개입 권리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먼로독트린을 소극적 불간섭 원칙에서 적극적 개입주의 의의 미국 외교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
  - ‘루스벨트 코롤러리’는 먼로독트린의 명분(상호 불간섭 원칙)을 활용하되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면 미국이 먼저 서반구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서반구 패권 선언

### 3) 보호무역의 정점과 세계 경제위기

■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1930)」은 미국의 보호무역 체제가 극단적 형태로 확장된 사례로 평가됨.<sup>30)</sup>

- 1929년 10월 주식시장 붕괴로 시작된 경제 대공황은 실업률 급증과 농산물 가격 폭락을 초래함.<sup>31)</sup>
- 이에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 행정부는 농업 경제를 구제하기 위해 의회를 특별 소집하여 농산물 관세의 제한적 인상을 요청했고, 관세 개정 절차가 시작되자 산업계 각 분야의 이익집단들이 경쟁적으로 보호 요구를 제출하여 경제 전 부문의 관세를 인상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함.
  - 이 법안은 외국 제품을 막아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해야 한다는 논리로, 2만여 개의 과세 대상 수입품 기준 평균 관세율이 약 40%까지 도달했으며, 이후 수입품 가격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1932년에는 최고 59.1%까지 상승<sup>32)</sup>

26) Office of the Historian, U.S. Department of State, “Secretary of State John Hay and the Open Door Policy in China, 1899-1900”(검색일: 2026. 3. 24.).

27) Rosenberg(1999), *Financial Missionaries to the World: The Politics and Culture of Dollar Diplomacy, 1900-1930*.

28) Healy(1988), *Drive to Hegemony: The United States in the Caribbean, 1898-1917*.

29) 카터 대통령 시절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구적 통제권을 ‘토리호스-카터 조약(1977)’을 통해 파나마 정부에 반환하기로 함.

30) Eichengreen(1989),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oot-Hawley Tariff,” pp. 1-43.

31) 제1차 세계대전 중 황폐해진 유럽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은 생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전후 유럽 농업이 회복되면서 농산물 과잉과 가격 폭락이 초래되었음. 이에 따라 1920년 내내 미국 농업계는 극심한 경쟁과 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황 상태에 놓여 있었음.

32) Irwin(2011), *Peddling Protectionism: Smoot-Hawley and the Great Depression*.

- 이 법안은 지역, 산업별 이해가 얽혀있어 각자의 지역을 보호하려고 한 의원들의 의견을 서로 반영해 주는 로그롤링(Logrolling) 현상으로 인해 관세가 높아졌다는 비판을 받음.<sup>33)</sup>
-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주요 교역국의 보복관세를 야기하며 세계 무역량을 대폭 낮추는 데 기여했고, 대공황의 원인은 아니지만 공황을 심화시키고 장기화시킨 요인으로 평가함.<sup>34)</sup>

## 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중립주의에서 국제주의로의 전환

-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며 중립주의를 고수했으나,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전통적 고립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자유무역과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국제주의 노선을 채택함.<sup>35)</sup>
-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초기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립(Neutrality Acts of 1935)’을 유지했으나, 1930년대 후반 나치 독일과 일본의 팽창으로 인한 안보·민주주의 위협과 세계 경제붕괴 우려로 인한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점진적으로 개입정책을 추진함.<sup>36)</sup>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주도함.<sup>37)</sup>
  - 미국은 국제경제의 불안정과 무역 분절이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통화체제와 개방적 무역 질서를 제도화함으로써 세계 경제회복과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유지라는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
  - [금융] 1944년 7월 브레턴우즈 회의(Bretton Woods Conference)에서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를 중심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의 창설을 주도
  - [무역]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여하여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관세 인하와 비차별 원칙을 제도화함으로써 전후 다자 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이 되었고,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의 전신이 됨.
  - [안보] 1948년부터 1952년까지 시행된 마셜플랜(Marshall Plan, 유럽경제부흥계획)은 130억 달러를 서유럽 16개국에 지원하여 전후 경제 재건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1949년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소련의 팽창에 대응해 북대서양 지역의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
- Kolko(1972)는 미국이 국제질서를 설계하고 주도하는 방식이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와는 또 다른 형태의 자국우선주의로 미국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과 확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함.<sup>38)</sup>
  - 마셜플랜은 유럽 경제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공산주의 확산을 억제하고, 동시에 미국 상품 수출시장을 재건하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해석

33) Irwin(2011).

34) *Ibid*.

35) Dallek(1995), *Franklin D. Roosevelt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32-1945: With a New Afterword*

36) Dallek(1995)에 따르면 루스벨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국제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국내 정치와 의회의 고립주의 분위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입정책을 추진했는데, 루스벨트 행정부의 주요 정책으로는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RTAA: Reciprocal Trade Agreement Act)」을 제정하여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인한 고관세, 보복관세, 무역 붕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 인하와 무역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대서양 헌장(1941), 브레턴우즈 회의(1944) 승인 등 전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국제주의 외교 노선을 강화함.

37) Ikenberry(2001),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38) Kolko(1972), *The Limits of Power: The World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5-1954*.

## 라. 1960~70년대: 자유무역주의 속 자국이익 방어의 제도화

■ 케네디(John F. Kennedy) 행정부는 1957년 출범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던 공동대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sup>39)</sup>에 대응하여 다자간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을 제정함.<sup>40)</sup>

- 동 법은 5년간 관세를 최대 50% 인하할 수 있는 다자협상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GATT 제6차 다자협상인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 1964~67년)를 추진함.

○ 이를 통해 EEC 등 약 60여 개국과 비농산물 평균 35% 관세 인하, 약 4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양허를 달성하였고 GATT 반덤핑 코드(Anti-dumping Code)를 수립함.<sup>41)</sup>

- 1962년 「무역확장법」의 목적은 유럽 시장 통합 가속화로 인한 미국의 대유럽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에 따라 무역 협상을 통한 무역원활화가 목적이었으나, 냉전기 전략물자 보호를 위해 232조 예외적 조항을 포함시킴.<sup>42)</sup>

○ 제232조는 상무부가 특정 수입 품목(철강, 에너지, 방위산업 관련 물자 등)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고,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

○ 이 조항은 냉전 시기 제한적(에너지 안보 등)으로 사용되었으나<sup>43)</sup>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면서 안보 개념을 경제적 경쟁력과 산업 보호 영역으로 확장함.<sup>44)</sup>

■ 미국은 1960년대 후반 일본 및 서독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달러 과잉 공급과 금 준비 고갈로 인한 국제수지 위기가 심화되어 1971년 닉슨 쇼크(Nixon Shock)로 불리는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을 발표함.<sup>45)</sup>

-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1971년 8월 15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달러의 금 태환 중지, 10% 수입 과징금 부과, 90일간 임금·물가 동결, 고용 확대 정책, 정부지출 삭감 등의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달러 가치 방어, 무역수지 개선뿐 아니라 물가 안정, 고용 확대 등 종합적인 경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sup>46)</sup>

- 미국 내에서는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되 해외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면서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이 제정됨.

○ Destler(2005)는 닉슨 쇼크를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무역적자 확대·브레튼우즈 체제 붕괴·일본 및 서유럽의 경쟁력 부상으로 인해 국내 산업 보호 압력(노동조합, 산업 로비 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요구에 제도적으로 절충한 결과가 「1974년 무역법」이라고 분석함.<sup>47)</sup>

39) 공동대외관세(CET)는 관세동맹을 형성한 국가들이 역외 수입품에 부과하는 통일된 관세율로 EEC의 핵심 제도적 장치.

40) Zeiler(1999), *Free Trade, Free World: The Advent of GATT*.

41) Irwin(2017).

42) Hufbauer *et al.*(2018), "Section 232 Investigations: The Key to Steel and Aluminum Tariffs."

43) 1969년 중등 석유 의존도 증가와 국내 석유 산업 약화를 우려하여 232조 근거로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했고 그에 대한 조치로 석유 수입 할당제(import quota)를 유지. 1973년 OPEC 석유 금수조치로 석유 수입 문제를 232조 근거로 계속 조사했고 조치로 전략석유비축(SPR) 정책 추진.

44) Bown(2021), "The US-China Trade War and Phase One Agreement."

45) Irwin(2017).

46) 동맹국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된 이 조치(Executive Order 11615; Proclamation 4074)로 인해 받은 충격을 닉슨 쇼크로 일컫음.

- 이 무역법의 핵심 조항은 301조로 외국정부가 미국기업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무역관행 시행 시 미국 대통령이 조사 명령 후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됨.
- 당시 섬유, 철강, 신발 등의 수입 경쟁에 직면한 산업 노조와 경영진이 의회에 강력한 보호주의 압력을 행사

### 글상자 1. 미국 자국우선주의 기조의 대외경제 관련 법률

〈국가비상·안보를 통한 경제 통제 관련 법률〉

- **Inten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 1977):**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포 혹은 해외발 비정상적 위협 시 대외경제 제재를 광범위하게 조치할 수 있게 한 특별법

〈관세법〉

- **Tariff Act of 1789:** 미국 최초의 관세법. 연방정부 재정 확보(관세 수입 의존도 90% 이상)와 초기 산업 보호 목적으로 수입품에 관세(평균 관세율 8.5%) 부과
- **Tariff Act of 1816:** 국내 핵심 산업기반 보호 목적 관세법. 1812년 전쟁 이후 영국산 면직물, 모직, 철강 제품의 대미 덤핑 공세에 대응해 고율관세 부과
- **Tariff Act of 1828:** 북부 산업(제조업) 보호를 위해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남부의 강한 반발과 무효화 위기를 촉발한 초고율(60% 증가세) 보호관세법. 유럽에 면화를 수출하는 남부 대농장주들에게 ‘가증스런 관세(Tariff of Abominations)’로 불림.
- **Tariff Act of 1890(맥킨리 관세법):** 평균 관세율을 약 50%까지 인상하는 한편 대통령이 특정 품목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교역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관세 입하 협정(Reciprocity agreements) 체결 가능 권한 부여
- **Tariff Act of 1897(딩글리 관세법):**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평균 관세율을 약 50% 수준까지 인상, 대통령이 상호주의 조약을 통해 일부 관세를 인하할 수 있는 권한(Reciprocity provision) 포함
- **Tariff Act of 1922(포드니-맥컴버 관세법):** 1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 보호를 위해 평균 관세율을 크게 인상
  - 관세법 315조: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의 권고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최대 50% 내 관세율 조정 권한 부여
- **Tariff Act of 1930(스무트-홀리 관세법):** 대공황기 제정, 반덤핑·불공정수입 규제
  - 관세법 337조(ITC 조치): 지식재산권 침해·불공정 수입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 또는 중지·중단 명령 가능
  - 관세법 338조(대통령 권한): 외국이 대미 차별적 불공정한 관세 또는 무역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부과
  - 관세법 701조(상무부/ITC)<sup>48)</sup>: 보조금 지급 및 국내 산업 피해 시 상계관세 부과
  - 관세법 731조(상무부/ITC): 덤핑이 존재하고 국내 산업 피해가 있을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무역법〉

- **Trade Expansion Act of 1962:** 냉전기 통상 확대 및 국가안보 조항 도입
  -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이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관세·쿼터 등 수입 조정 가능
- **Trade Act of 1974:** 닉슨 대통령 이후 통상정책 전면 개편, 대통령 권한 강화
  - 무역법 301조: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협정위반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
  - 무역법 122조: 국제수지 위기·달러 급락 등 국제 지급 문제 시 최대 15% 한시 관세(150일) 또는 쿼터 부과 가능
  - 무역법 201조: 특정 품목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우려 시 긴급수입제한을 허용하는 세이프가드
  - 무역법 151조: 대통령 무역 협상 권한 강화를 위해 의회 신속처리권(Fast Track Authority) 도입
-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무역적자 확대 대응 및 통상압력 강화, 공격적 통상정책 제도화를 위해 1972년 무역법을 중심으로 수정·강화한 후속법
  - 무역법 301조 강화: USTR에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제재 절차 의무화 및 보복조치 강화
  - 무역법 310조(super 301): USTR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행하는 우선 협상 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 지정, 협상 실패 시 의무적 보복조치 시행
  - 무역법 182조(Special 301):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지정하고 통상 압력 및 제재 가능

자료: <https://www.usitc.gov>; <https://ustr.gov>;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4. 3.)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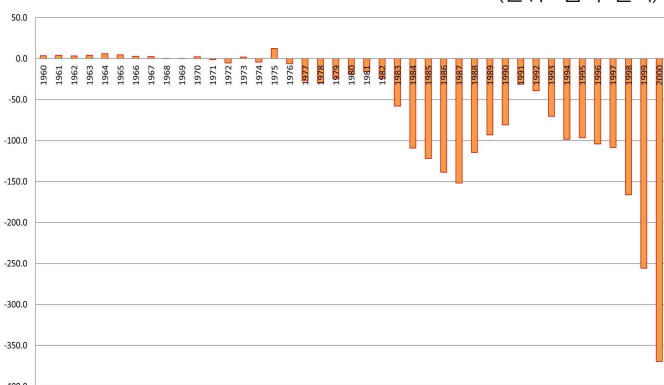
## 마.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적 보호주의

■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Ronald Reagan, 재임 1981~89년)<sup>49)</sup>는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함.<sup>50)</sup>

-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의 재건(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정치적 구호 아래 경제적 자국우선주의 성격을 지닌 정책을 추진함.
  - 198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자유무역 원칙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내 정치적·경제적 압박이 증대됨.
- 레이건 행정부는 자유무역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자유무역협정 확대(우루과이라운드 개시, 이스라엘·캐나다 FTA 등)를 추진하였으나, 동시에 ‘공정한 경쟁(Fair Trade)’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선택적 보호조치를 시행함.
  - 1984년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EEC, 브라질, 멕시코, 한국 등 20여 개국과 자발적 수출제한협정(VRA: Voluntary Restraint Agreement)을 체결하여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함.
  - 1985년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를 통해 달러화 절하와 엔화·마르크화 절상을 위한 협조 개입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1980년부터 1985년 사이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 55% 절상되면서 미국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의회 내 보호주의 입법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응한 조치였음.<sup>51)</sup>
  - 1988년 「종합무역경쟁력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은 기존의 「1974년 무역법」 301조를 대폭 강화하여 보복 권한을 대통령에서 USTR로 이전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을 의무화함.<sup>52)</sup>
- 이러한 정책들은 레이건 행정부의 ‘자유무역’이라는 수사와 ‘전략적 보호주의’라는 실제 정책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로 미국이 국내 정치적 압력에 따라 보호정책을 선택적으로 사용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 미국 무역적자 추이(1960~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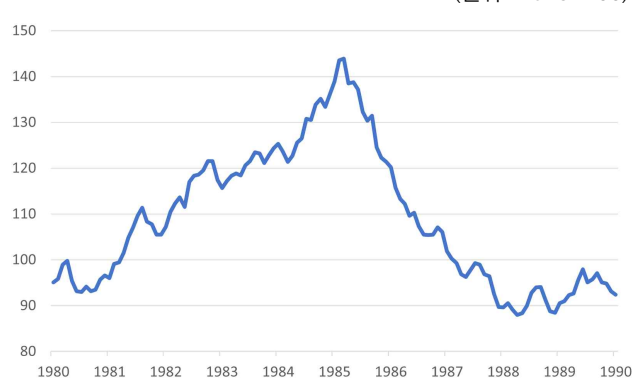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BEA,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1960-present" (검색일: 2026. 3. 24.).

그림 3. 달러 인덱스 추이

(단위: 1973=100)



자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검색일: 2026. 3. 23.).

48) 상무부에서 덤핑 보조금 존재 판단, ITC 산업 피해 판단 후 요건 충족 시 자동적 관세 부과.

49) 레이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자유무역 지지자였으나 당시 무역적자 확대에 직면하며 상당한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

50) Ikenson(1988), "The Reagan Record on Trade: Rhetoric vs. Reality."

51) Funabashi(1988), "Managing the Dollar: From the Plaza to the Louvre."

5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 12. 14.),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Origin, evolution, and use.

## 바. 1990년대: 자유주의 국제질서 주도과 대중 압박

■ 부시 행정부(George H.W. Bush, 재임 1989~93년)는 1989년 천안문 광장 진압 사태 이후 공식 제재를 발동하였으나 소련 견제, 중국시장 개방, 미국기업 이익 확보, 체제 변환 유도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관여 정책(engagement Policy)을 추구함.<sup>53)</sup>

- 천안문 진압 직후 부시 행정부는 무기 판매 및 군사 교류 중단, 국제금융기관의 대중 용자 제한 요청 등 일련의 제재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처벌적 수단으로 운용하기보다, 양국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둠.

○ 1989년 7월과 12월 부시 대통령은 국가안보보좌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Brent Scowcroft)와 국무부 부장관 로런스 이글버거(Lawrence Eagleburger)를 베이징에 비밀리 파견하여 안정적 관계 유지 의사를 전달함.<sup>54)</sup>

- 1980년에 부여된 중국의 최혜국(MFN: Most-Favored-Nation) 지위에 인권 조건을 연계하는 법안이 1991년과 1992년 두 차례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부시 대통령은 두 경우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중 관계의 전략적 연속성을 보존하려고 함.<sup>55)</sup>

○ 부시 행정부는 냉전 종식 전까지 소련 견제를 위한 전략적 카드로서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중시하였으며, 이는 냉전 종식 이후에는 중국의 거대한 인구와 시장이 미국기업에 막대한 이익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경제적 계산으로 이루어진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관여 정책에는 경제적 교류 심화가 중국 내 자유화·체제 변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가정도 병존

○ 결과적으로 이 시기의 압박과 관여 정책은 중국을 미국 주도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나, 중국 공산당 체제의 안정화와 경제 굴기를 동시에 촉진하는 역설을 낳았다는 평가가 있음.<sup>56)</sup>

■ 클린턴 행정부(Bill Clinton, 재임 1993~2001년)는 경제적 자유화와 세계경제로의 통합이 궁극적으로 중국 내 민주주의와 법치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제하여 ‘관여 전략’을 대중 정책의 공식 기조로 채택하였으나, 재임기간에 보호주의적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중국을 압박하기도 함.<sup>57)</sup>

- 클린턴은 1993년 5월 28일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의 MFN 지위 갱신을 이민의 자유·티베트 문제·언론 자유 등 인권 조건과 연계함.<sup>58)</sup>

○ 중국이 조건 이행을 거부하고 미국 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1년 만에 연계 정책을 포기하고 이후 경제적 관여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 USTR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의 핵심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 보호를 위해 「종합무역경쟁력법(1988)」

53) Harding(1990), "The Impact of Tiananmen on China's Foreign Policy."

54) Scowcroft(2006), "China conference remarks.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Historian."

55) Bush(2019), *30 years after Tiananmen Square: A look back on Congress' forceful response*.

56) Friedberg(2019), "Smart competition: Adapting U.S. strategy toward China at 40 years."

57) Shambaugh(2025), *Breaking the Engagement: How China Won & Lost America*.

58) Clinton(1993, 5. 28.), "Executive Order 12850: Conditions for Renewal of Most-Favored-Nation Status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94"(검색일: 2026. 4. 3.).

182조(special 301)상 중국을 최우선 감시국으로 지정하고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공표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이행을 압박함.<sup>59)</sup>

-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 최우선 감시국 지정은 부시 행정부 시기인 1991년 처음 지정되었는데, 이후 체결된 1992년 미중 양자 지식재산권 협정 이행 부진을 이유로 미국은 1994년 6월 중국을 최우선 감시국으로 재지정함.
- 중국은 마감일 직전 부분적 이행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실제 제재를 모면하였으며 압박-합의-이행부진-재압박 패턴이 반복됨.
-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의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 품목별 세이프가드(12년), 반덤핑 특별조항(15년) 등 기존 가입국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WTO 플러스 조건’을 중국에 수용하도록 요구함.<sup>60)</sup>
- 이 시기 미국의 대중 정책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WTO 편입, 체제 전환 기대), 경제적 이해관계(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시장 접근), 민주주의라는 가치 외교(인권 보호) 목표가 복잡하게 교차하였으며, 충돌 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선택이 반복됨.

## 사. 21세기: 자국우선주의의 재부상

### 1) 트럼프 행정부 이전의 자국우선주의 기조 부상

■ 21세기 들어 세계화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으로 미국의 상대적 우위가 약화되면서 미국 대외경제정책 내에서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점진적으로 재부상함.

- 2001년 9·11 테러 이후 부시(George W. Bush, 재임 2001~09년)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에 점차 안보 중심적·자국 우선적 성격을 강화해 나감.
  - 당시 USTR 로버트 켈릭(Robert Zoellick) 대표는 ‘Countering Terror with Trade’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무역정책을 테러 대응과 동맹 관리의 전략적 수단으로 재정의하고, 대통령의 관세 조정 권한이 포함된 무역촉진 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의 확장을 주장함.<sup>61)</sup>
- 2002년 4월 부시 행정부는 수출행정국(BEA: 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을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으로 개편했으며, BIS는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에 대응하는 등 국가안보 중심의 임무로 재편함.<sup>62)</sup>
  - BIS는 트럼프 1기에 중국에 대한 군사적 최종 사용(military end use) 목적의 통제 품목 목록을 신설하여 수출 관리규정(EAR)상 비통제 품목이라도 중국의 군사용으로 전용될 경우 통제 대상으로 규율함.<sup>63)</sup>

59) USTR 홈페이지, “Special 301 Reports, 1994-1996.”

60) Bown(2007), “China’s WTO Entry: Antidumping, Safeguards, and Dispute Settlement.”

61) Zoellick(2001. 9. 20.), “Countering terror with trade.” 기존 「무역법(1974)」의 Fast Track Authority(무역촉진권한)를 TPA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도 확장함.

62) U.S.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홈페이지,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검색일: 2026. 4. 2.).

63) Borkovic *et al.*(2021), “BIS Has New Authorities to Impose Controls over Activities of U.S. Persons in Support of Foreign Military, Security, or Intelligence Services”(검색일: 2026. 4. 2.).

- 투자 영역에서도 기술·에너지·인프라 등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경제안보 중심 사고가 강화되어 국가안보를 근거로 외국자본의 미국기업 인수에 대해 국가안보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권한이 강화됨.
- CFIUS 권한 강화 과정은 외국자본의 국내 핵심 산업 인수에 대한 경계심이 일본 위협, 아랍권 자본, 중국 자본으로 전환되어 왔음을 보여주며 1988년 ‘엑슨-플로리오 조항(Exon-Florio Amendment)’ 도입, 2007년 「외국인투자안보법(FINSA: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제정, 2018년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제정 등을 통해 CFIUS의 권한이 점차 확대됨.<sup>64)</sup>

표 1. 미국 외국인투자심의(CFIUS)의 권한 확대 과정

연도	권한 확대 과정	주요 내용
1975년	CFIUS 창설	외국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목적
1988년	엑슨-플로리오 조항 도입	1980년대 일본 기업(Fujitsu)의 미국 첨단기업(Fairchild Semiconductor) 인수 시도 이후 대통령 거래 차단 권한을 명문화하고 단순 자문기구에서 심사기구로 전환
2007년	FINSA 제정	미국 항만 운영권을 UAE 국영기업(Dubai Ports World)이 인수하려고 하면서 CFIUS 심사 역량 부족에 대한 의회의 비판이 고조되자, FINSA를 제정하여 CFIUS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안보 심사 요인을 확대
2018년	FIRRMA 제정	반도체, AI 등 기술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로 주요 안보 우려 증대
2022년	CFIUS 심사 기준 확대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EO 14083)을 통해 CFIUS 심사 기준에 공급망 안정성, 핵심 기술 경쟁, 데이터 보안, 외국 정부의 영향력 등의 심사 요소를 추가

자료: Tarbert(2020), “Modernizing CFIUS,” pp. 1477-1524; Biden White House Archive, “Executive Order 14083”(검색일: 2026. 4. 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오바마(Barack Obama, 재임 2009~17년) 행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출범하여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식 지지 기조로 채택하였으나,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와 반세계화 여론이 형성되는 조건 속에서 자국우선주의적 정책 요소를 점진적으로 도입함.

- 2009년 「경기부양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은 재정 부양 패키지 법안이었으며, ‘미국산 우선 구매(Buy American)’ 조항이 포함되어 공공시설의 건설·개보수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미국산으로 조달할 것을 의무화함.<sup>65)</sup>
- 이 조항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NAFTA 의무와의 마찰을 초래하여 캐나다, EU 등 주요 교역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였으며 2010년 미국-캐나다 양자 정부조달 협정을 통해 일부 완충됨.
- 미국산 구매와 관련된 법률은 ‘1933년 후버 행정부의 미국산 우선구매법(연방정부 직접 구매)’과 ‘1982년 레이건 행정부의 미국산 우선구매법(교통 인프라 한정)’으로 제정된 적이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적용 대상이 법 재원으로 시행되는 모든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확장됨.<sup>66)</sup>
- 「미국산 우선구매법」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 연방보조금으로 시행되는 모든 인프라 사업에 확대 적용되는 등 오바마 정부 이후에도 이어졌음.

64) Jackson and Cimino-Isaccs(2020. 2. 21.), “CFIUS Reform under FIRRMA.”

65) U.S. Congress(2009), “H.R. 1: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66) Hufbauer(2017. 5.), “Buy American’ Is Bad for Taxpayers and Worse for Exports.” PIIE Trade and Investment Policy Watch.

표 2. 미국산 우선구매 정책 연혁

연도	행정부	정책/법령명	주요 내용
1933	후버	Buy American Act	미국 최초 연방조달 미국산(국내 제조, 부품의 국내산 비중 50% 이상) 우선 구매법
1941	F. 루스벨트	Berry Amendment (국방조달법 부속조항)	국방부 조달에 적용. 식품·의류·직물 등을 100% 미국산으로 구매 의무화 1994년 영구법제화
1979	카터	Trade Agreements Act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등 조약 상대국 제품은 예외적으로 미국산과 동등한 대우 허용
1982	레이건	Buy America Act	교통부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 인프라 사업에 철강, 철, 제조품 미국산 의무화, 제3자(주정부) 구매에도 적용 확대
2009	오바마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법 재원으로 시행하는 공공사업은 철강, 철, 제조품 미국산 의무화, 단, 전체 사업비를 25% 이상 상승시키는 경우 예외 허용
2017	트럼프	(EO)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미국산 우선구매법」 준수 강화 및 예외(waiver) 최소화 지시, 기관별 이행 현황 점검 의무화, 덤핑 제품 포함 외국산 구매 시 예외 인정 불가 원칙 선언
2019		(EO) Maximizing Use of American-Made Goods	국내산 부품 비중 기준 50% → 55% 상향, 철강·철 제품은 외국산 함량 5% 미만 기준 도입, 외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 페널티 상향(대기업 20%, 중소기업 30%)
2020		(EO) Essential Medicines	필수 의약품·의료장비의 미국 내 조달 의무화
2021	바이든	IIJA 내 Build America, Buy America Act 포함	연방보조금으로 시행되는 모든 인프라 사업에 철강·철·제조품·건설자재 미국산 의무화, 적용 대상을 기존 교통 분야에서 에너지·통신·수자원 등 전체 인프라로 대폭 확대
2021		(EO) 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백악관 내 Made in America Office 신설, 예외(waiver) 부여 시 Made in America Office 검토 의무화, 국내산 기준을 비용 기반→부가가치 기반으로 전환 추진 지시
2025	트럼프	(EO) America First Trade Policy	미국산 우선 구매법 관련 정책 이행과 영향 재검토 및 강화 방향 제시, 허위 'Made in USA' 표시 단속 강화 지시(2026.3) 추가, 외국 보조금 지급 제품이 미국 조달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사 지시

자료: UC Santa Barbara 미국 대통령 문서 아카이브 홈페이지(<https://www.presidency.ucsb.edu>); 백악관 행정조치 페이지(<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 참고하여 저자 작성(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4. 3.).

- 2011년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Pivot to Asia)은 중동에서의 군사적 부담을 축소하고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경제·안보 이익을 재설정하려는 시도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와 미국기업의 시장·규범 선점을 대외전략의 목표로 전환함.
  -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9월 전미철강노조(USW)의 청원을 수용하여 「1974년 무역법」 421조(중국 특별 세이프 가드)를 근거로 중국산 타이어에 3년간 35%, 30%, 25%의 체감 관세 부과<sup>67)</sup>
  -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반덤핑·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법령을 근거로 중국산 태양광 제조업체에 관세를 부과하였고, 2015년 중국 업체들이 제3국(대만 등)을 우회하여 관세를 회피하자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2차 관세를 부과<sup>68)</sup>
  -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민주당 제조업 지역구 의원, 공화당 보호주의 성향 의원 등의 반발로 비준에 실패했는데 이는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정치적 지지 기반이 약화되고 자국우선주의 성향이 강화된 결과로 평가<sup>69)</sup>

67) Elsea(2012), "Chinese tire imports: Section 421 safeguards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R40844)."

68) Darby(2014), "U.S.-China Solar Trade War: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2012 and 2014 Antidumping Disputes."

- 미국은 NATO 창설 이래 동맹국들과 형평성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지속해 왔는데 오바마 행정부 때도 회원국들의 GDP 2%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 약속을 지속적으로 압박함.
-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NATO 정상회의 합의문에 2% 목표를 명문화하고, 2016년 리비아에서의 동맹국 부담 기피 문제를 언급하며 영국이 2%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특별 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 이후 미국 내 패권 비용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약화되면서 무임승차 동맹국에 대한 비판이 거세짐.<sup>70)</sup>

## 2)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America First'를 공식 슬로건으로 채택함으로써, 기존에 잠재되어 있던 자국우선주의 흐름을 전면적·공세적 형태로 정책화하였으며, 다자무역 규범에 대한 회의를 토대로 기존 다자 분쟁해결절차를 우회하는 양자 협상을 통한 직접적 실리를 추구함.

- Rodrik(2021)은 1990년대 이후 심화된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가 선진국 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분배 격차를 악화시켜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포퓰리즘 여론의 토대를 형성했다고 분석하였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세계화 부작용에 대한 국내 정치적 반발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sup>71)</sup>
- 이 시기의 핵심 목표는 중국 견제에 집중되었으며 대중 통상 압박 및 기술 디커플링 정책이 주를 이룸.
  -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이전, 국영 기업 보조금 등을 불공정 관행으로 규정하고, 약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함.<sup>72)</sup>
  - 이는 WTO 다자 분쟁해결절차를 우회한 일방적 무역 제재로서, 협상을 통한 양보를 강제하는 선택적 압박 전략이었음.<sup>73)</sup>
  - 기술·디지털 분야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본격화되어 2019년 화웨이와 26개국 소재 68개 계열사를 수출통제 대상 기업 목록(Entity List)에 등재함으로써 미국기업의 핵심 부품·소프트웨어 공급을 제한함.<sup>74)</sup>
  - 2020년에는 틱톡(TikTok), 위챗(WeChat) 등 중국산 앱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여 IEEPA에 근거한 거래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함.<sup>75)</sup>
- 미국은 동맹국인 EU, 캐나다, 멕시코 등 전통적 동맹국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 해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부과함.<sup>76)</sup>
  - 이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자국우선주의가 동맹·파트너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유무역 질서와 동맹 결속 사이의 구조적 긴장을 가시화함.
- 트럼프 1기 자국우선주의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301조 등 법적 도구를 활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협상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려는 선택적 압박 전략이었음.

69) Rodrik(2018), "Populism and the Economics of Globalization," pp. 12-33.

70) Goldberg(2016. 4.), "The Obama Doctrine."

71) Rodrik(2021), "Why Does Globalization Fuel Populism? Economics, Culture, and the Rise of Right-Wing Populism."

72) Trachtenberg(2026),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73) Bown and Kolb(2021), "Trade protection along supply chains."

74) U.S. DoC(2019. 5. 15.), "Department of Commerce announces the addition of Huawei Technologies Co. Ltd. to the Entity List."

75) "Is TikTok Being Banned? U.S. Delays Plan to Block Downloads With Deal Reached"(2020. 9. 20.).

76) Amadeo and McBride (2018. 3. 8.). "The risks of U.S. steel and aluminum tariffs."

-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고 개별 양자 협상을 통한 직접적 이익 극대화 전략으로 전환함.
- 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여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으로 대체하였으며,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역내 부가가치 비율 75%로 상향), 멕시코 노동기준 상향, 일몰조항(16년) 도입 등 미국 제조업에 유리한 조항들을 명문화함.<sup>77)</sup>
-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제약 분야의 대한국 시장 접근 확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 철폐 시한 2041년까지 연장, 232조 철강 관세 면제 조건으로 품목별 쿼터(2015~17년 평균의 70%) 부과를 포함한 협정 수정에 합의함.<sup>78)</sup>
- 미국은 기존 협정상 미국의 의무를 번복하거나 일방적 관세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미국 제조업에 유리한 비대칭적 조건을 이끌어냄.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감세 및 일자리법(TCJA: Tax Cuts and Jobs Act)」으로 국민에게 세제 우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FIRRMA로 외국자본의 미국 핵심 산업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자본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외국 투자에는 안보 장벽을 높임.

-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을 통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미국 기업과 자국민의 세후 소득 증대를 도모함.<sup>79)</sup>
-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FIRRMA를 제정하고 외국자본 특히 중국의 미국 핵심 산업 진입 심사를 대폭 강화함.<sup>80)</sup>
  - FIRRMA는 초당적 지지가 있었지만, 중국의 투자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안보 위협으로 재정의하고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국방·안보 패키지인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편입하여 제정함.<sup>81)</sup>
  - 기존에 '외국 기업의 미국기업 인수 합병'에 한정되었던 CFIUS 심사 대상을 소수지분 투자, 군사기지 인근 부동산 거래, 미국인 개인정보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로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기업을 직접 인수하지 않고 우회적 투자 방식으로 미국의 첨단기술과 민감 정보에 접근해 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음.
  - 외국 정부가 핵심 기술(critical technology)·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민감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data)에 관여하는 TID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여 외국자본의 미국 전략 자산 접근을 차단하는 경제안보 심사 체계를 제도화함.
- FIRRMA와 같이 NDAA에 편입된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은 수출통제 체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함.
  - ECRA는 1979년 「수출관리법(EAA)」 만료 이후 수출통제 운용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상무부 소속 산업안보국(BIS)의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운용 권한을 명문화함.
  - 특히 기존 통제 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던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우선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단행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기반이 됨.

77) Villarreal and Fergusson(2024 업데이트),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검색일: 2026. 4. 3.).

78) Cha and Zhang(2018), "KORUS revision: Not the worst outcome"(검색일: 2026. 4. 3.).

79) Tax Foundation 홈페이지, "Tax Cuts and Jobs Act (TCJA)"(검색일: 2026. 4. 3.).

80) Zable(2018. 8. 2.),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검색일: 2026. 4. 3.).

81) Cinelli et al.(2020. 1. 13.), *CFIUS issues final regulations under FIRRMA*.

표 3. 미국 수출통제 기관의 임무 변천(1987년~현재)

시기	기관명	핵심 위협	통제 대상
1987~2001년	BEA	냉전 시기의 소련 및 공산권	이중용도(민간산업용·군사용) 품목 전반
2002~17년	BIS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 WMD 확산	화학·생물·미사일 관련 품목
2018년~현재	BIS	중국의 군사 현대화, 기술 패권 경쟁	반도체·AI·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자료: U.S.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홈페이지,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검색일: 2026. 4. 2.).

### 3) 바이든 행정부 시기 동맹 협력과 자국우선주의 정책 유지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 부과된 대중국 관세를 대부분 유지했으며, 총 2조 달러 규모의 입법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 기반 재건 및 공급망 재편을 추진함.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수사를 지양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재편과 규칙 기반 국제질서 복원을 강조했으나, 수천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세액공제와 자국산 조달 의무화가 WTO 보조금협상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 통상 마찰을 빚는 등 실질적으로는 자국중심주의 정책 기조를 이어감.
  - 2021년 「인프라투자고용법(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교통 및 인프라 투자를 포함하며, 「미국산 우선 구매법(Build America, Buy America Act)」을 포함시켜 도로·교량·광대역·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의 자재와 제조물을 미국산으로 의무화함.<sup>82)</sup>
  - 2021년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전반에 강제노동 반증가능 추정 원칙(rebuttable presumption)을 적용하여 중국산 태양광 모듈(폴리실리콘 규제)의 미국 공급망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인권 규범의 무역 수단화를 통해 대중 공급망 재편을 동시에 추구<sup>83)</sup>
  - 2022년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반도체를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527억 달러의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대중 디커플링 조항<sup>84)</sup>을 포함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을 유도함.<sup>85)</sup>
  -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기후 대응을 명분으로 3,690억 달러를 투입하되, 전기차 세액공제를 북미 생산 요건 및 배터리 핵심 광물의 우방국 조달 요건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미국 내 청정에너지 제조 기반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으로 기능함.<sup>86)</sup>
-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25일 미국산 구입(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연방 조달에서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 원칙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후속 규칙 제정을 통해 국내산 부품 함량 기준을 기존 55%에서 단계적으로 75%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강화한 미국산 우선 구매 기준을 더욱 강화함.
-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와 대중 견제라는 목표가 특정 정치 성향에 국한되지 않고 양당이 공유하는 초당적 정책 기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함.<sup>87)</sup>

82) 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GFOA) 홈페이지,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검색일: 2026. 4. 3.).

83) Flacks and Songy(2022. 6. 27.), "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Goes into Effect"(검색일: 2026. 4. 3.).

84)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 신·증설 금지 조항.

85) Hufbauer and Hogan(2022. 10.), "CHIPS Act Will Spur US Production but Not Foreclose China"(검색일: 2026. 4. 3.).

86) Fernández *et al.*(2023),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ndustrial Policy for the Energy Transition?" pp. 1131-1152.

87) Juhász, Lane, and Rodrik(2023), "The New Economic of Industrial Policy"(검색일: 2026. 4. 3.).

표 4.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보호 및 대중 견제 관련 주요 법률 및 행정조치

법률·행정조치명	발효일	핵심 내용
인프라투자자고용법(IIJA)	2021. 11. 15.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인프라 투자에 미국산 우선 구매 원칙 전면 적용, 도로, 교량, 광대역, 전력망 자재의 미국산 의무화
Buy American 미국산 비율 상향	2022. 10. 25.	연방정부 조달 미국산 의무 비율을 55% → 75%(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ct)	2022. 8. 9.	반도체 보조금·세액공제 527억 달러 규모, 수혜 기업의 대중 첨단 반도체 생산 10년간 금지 조항 포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2. 8. 16.	기후·에너지 분야 3,690억 달러 투자, 전기차 세액공제에 북미 생산 부품·배터리 요건 부과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EAR) 개정	2022. 10. 7. 2023. 10. 17. 2024. 12. 2.	첨단 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SME)·AI 칩의 대중 수출 전면 차단, 미국 시민권자의 중국 반도체 기업 취업도 제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2022. 6. 21.	신장 위구르 생산 제품의 강제노동 추정 원칙 도입, 반증 없는 한 미국 수입 전면 금지, 중국산 태양광 패널·면화 공급망 직격
대중 대외투자제한 행정명령	2025. 1. 2.	미국 자본의 중국 반도체·양자컴퓨팅·AI 기업 투자 금지·신고 의무화, CFIUS(외국자본 유입 차단)의 역방향 버전

자료: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아카이브(<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검색일: 2026. 4. 3.)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4)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1기 때와 달리 경제, 안보, 외교 영역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중국 견제뿐 아니라 광범위한 교역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직접적 실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기존 자유주의 국제경제 질서에 근본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지정하고, 중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 국가별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함.
  - 이로써 기존 관세를 포함한 평균 실효관세율은 22.5%(2025. 4. 2. 기준)로 상승하여 19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함.<sup>88)</sup>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호 관세 이외에도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품목별 관세 등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최대한 활용
  - USTR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다보스 연설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해밀턴주의 보호관세 부활로 설명하며 관세를 국내 산업기반을 재건하고 경제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수단으로 제시<sup>89)</sup>
  - NATO 방위비 분담 요구 강화 및 동맹의 가치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재정의하며, 동맹국에 대한 관세부과와 집단방위 공약의 조건부화(방위비 미달 국가는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를 협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함.<sup>90)</sup>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과거 루이지애나, 알래스카 등의 매입 재현으로 영토 확장 시도와 더불어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통해 서반구 내 패권을 재확립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제3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추진함.<sup>91)</sup>
  -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트럼프 코롤러리(Trump Corollary)’

88) The Budget Lab at Yale(2025a. 4. 2.), “Where We Stand: The Fiscal, Economic, and Distributional Effects of All U.S. Tariffs Enacted in 2025 Through April 2”(검색일: 2026. 4. 3.).

89) USTR(2026. 1. 20.), “From Hamilton to Today: Trade and U.S. Economic Strategy”(검색일: 2026. 4. 3.).

90) INSS(2025. 7. 15.), “NATO Summit June 2025—A Victory for Trump and Security Challenges for Europe”(검색일: 2026. 4. 3.).

91) 2025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만로 독트린의 서반구 배타적 영향권 주장이 트럼프 코롤러리로 재현됨. 이는 중국 등 제3국의 서반구 내 역외 세력의 활동을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

를 공식 명시하여 먼로독트린을 현대적 맥락에서 복원·강화하였으며, 서반구 내 중국 등 제3국 세력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전략과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 핵심 지역에 대한 통제권 확보 전략에 힘을 실어줌.<sup>92)</sup>

- 그린란드 매입 구상은 전략적 가치와 북극 항로·자원 접근성을 고려해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제기되었으나, 미국은 2026년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NATO 사무총장과 논의 후 강제 병합 시도를 철회하고 NATO 차원의 북극 지역 감시 및 방어 집중을 위한 ‘북극 센트리(Arctic Sentry) 이니셔티브’를 출범함.<sup>93)</sup>
- 파나마 운하의 경우 미국은 중국 관련 기업이 파나마 운하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운하 운영권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파나마 정부가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탈퇴를 선언하며 협상이 일단락되었음.<sup>94)</sup>
-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미군 특수부대에게 체포되어 맨해튼 연방법원으로 압송되었으며, 미국은 석유 수출통제와 금융제재 등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고립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베네수엘라의 대외관계 및 자원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sup>95)</sup>
-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환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미 지역을 미국의 전략적·경제적 영향권으로 더욱 긴밀히 편입시키려는 정치적 메시지이자 협상의 지렛대로 해석됨.
-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 행정명령(E.O.14347)을 통해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에 1789년 창설 당시 명칭인 ‘전쟁부(Department of War)’를 부제(secondary title)로 공식 부여하여, 군사력을 방어적 억제제가 아닌 국익 관철을 위한 공격적 도구로 재정의하는 기초를 상징적으로 나타냄.<sup>96)</sup>

표 5.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주요 관세 조치

행정조치	관세율	법적 근거	시행일
불법마약 유입 차단을 위한 관세부과	캐나다 25% (에너지 10%)	IEEPA	2025. 2. 1. (30일 유예)
불법이민 및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한 관세부과	멕시코 25%	IEEPA	
중국의 펜타닐 및 전구체 화학물질의 흐름 차단을 위한 관세부과	10% (3월 4일: 20%로 인상)	IEEPA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	25%	무역확장법 232조	2025. 3. 12.
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수입 조정	25%	무역확장법 232조	2025. 3. 12.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입 조정	25%	무역확장법 232조	2025. 4. 3.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보편관세: 10%	IEEPA	2025. 4. 5.
	상호관세: 국가별 상이	IEEPA	2025. 4. 9. (90일 유예)
미국으로의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	25%	무역확장법 232조	2025. 5. 3.
미국으로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조정(강화)	25%→50% 상향	무역확장법 232조	2025. 6. 4.
구리(반제품 구리·구리 집약적 파생 제품)	50%	무역확장법 232조	2025. 8. 1.
목재·목재 제품	25%(품목별 차등 세율)	무역확장법 232조	2025. 10. 14.
중·대형 트럭·부품·버스	25%	무역확장법 232조	2025. 11. 1.
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파생 상품	25%	무역확장법 232조	2026. 1. 14.
IEEPA 관세 위헌 판결에 따른 임시(150일) 관세	15%	무역법 122조	2026. 2. 20.
의약품 및 관련 제품 차등 관세 부과	최대 100% (국가·제품·기업별 상이)	무역확장법 232조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

자료: 강구상 외(2025),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기준 전망』, 연구보고서 25-08, p. 49, 표 2-5를 참고하여 저자 업데이트

92) The White House(2025b. 12.),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검색일: 2026. 4. 3.).

93) Associated Press(2026. 2. 11.), “NATO launches Arctic Sentry military effort in seeking to move on from Greenland dispute”(검색일: 2026. 4. 3.).

94) The Guardian(2025. 1. 23.), “Donald Trump and the Panama Canal: the facts behind his China claims”(검색일: 2026. 4. 22.).

95) The Wall Street Journal(2026a. 1. 7.), “Venezuela to Give U.S. Up to 50 Million Barrels of Oil, Trump Says”(검색일: 2026. 4. 3.).

96) The White House(2025a. 9. 5.), “Restoring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War”(검색일: 2026. 4. 3.). 법적 명칭 변경은 의회 입법 과정을 피하기 위해 행정명령 한계 내에서 부제 방식을 활용.

표 6. 시대별 미국 자국우선주의 정책 변화

시대	무역정책	대외관계·외교	산업·투자 정책
건국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법(1789): 평균 8.5% 세입+산업 보호</li> <li>톤세법(1789): 외국선박 50¢, 미국선박 6¢</li> <li>관세법(1816): 영국 덤핑 대응 고율 관세</li> <li>관세법(1828): 평균 60%, '혐오관세' 남부 반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워싱턴 고별사(1769): 영구동맹 회피·중립주의</li> <li>먼로독트린(1823): 서반구 불간섭 원칙</li> <li>유럽 열강으로부터 경제적 자립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밀턴 제조업 보고서(1791): 관세를 통한 신생국 산업육성 방안 제시</li> <li>아메리칸 시스템(1824): 보호관세, 국립은행, 인프라 투자의 국가경제 프레임워크 제시</li> </ul>
19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릴 관세법(1861): 철강·섬유·기계 보호</li> <li>맥킨리 관세법(1890): 평균 48% 상호주의 조항</li> <li>윌슨-고먼 관세법(1894): 관세 부분 인하, 최초 평시 소득세 도입(위헌 판결)</li> <li>딩글리 관세법(1897): 평균 51%로 재인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스페인전(1898): 필리핀·괌·푸에르토리코 획득</li> <li>문호개방정책(1899): 중국시장 균등 접근 요구</li> <li>달러 외교: 중남미 차관·관세징수권 장악</li> <li>루스벨트 코롤러리(1904): 서반구 개입 정당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전쟁 이후 공화당 주도 보호관세로 철강·제조업 급성장</li> <li>관세 수입이 연방 재정의 90% 이상 담당</li> <li>19세기 후반 과잉생산 → 해외시장 개척으로 전환</li> </ul>
대공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무트-홀리관세법(1930): 2만 개 품목 40%</li> <li>RTAA(1934): 양자 관세 인하 협정, 의회 → 대통령 관세 협상 권한 이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딜 외교: 중남미 Good Neighbor Policy</li> <li>고립주의 유지: 중립법(1935) 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딜 정책: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내수 부양</li> <li>미국 우선 구매법(1933): 연방조달 미국산 우선 첫 법률 제정</li> </ul>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법(1974): 301조(불공정무역 자국 산업 방어)·201조(수입 급증 셰이프가드)·122조(국제수지 위기)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닉슨 쇼크(1971): 달러 금태환 중단, 90일간 임금·물가 동결, 10% 수입 과징금 부과 등</li> <li>IEEPA(1977): 대통령 비상경제권한 법제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FIUS 창설(1975): 외국자본의 미국기업 인수에 대한 경계심 표면화</li> <li>섬유·철강 등 수입 경쟁 산업에 대한 자발적 수출 제한협정 압박</li> </ul>
1980~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수출제한협정(1981): 자동차 수출제한 압박 결과</li> <li>플라자 합의(1985): 달러 절하 협조 개입</li> <li>우루과이라운드 개시(1986)</li> <li>무역법(1988): 슈퍼 301조(불공정국 지정·의무 보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레이건: 자유무역 수사+전략적 보호주의 병행</li> <li>부시·클린턴: 중국 관여정책</li> <li>9·11 테러 이후: 테러 대응·동맹 관리로 무역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레이건: 감세·규제 완화 중심 공급 측 정책 추진</li> <li>철강·섬유·신발 등 수입 경쟁 산업 선택적 보호</li> <li>미국 우선 구매법(1982): 교통 인프라로 확대</li> <li>WTO 규범 틀 내 산업보호(반덤핑·상계관세)</li> </ul>
오바마 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산 타이어 관세(2009)</li> <li>중국산 태양광 반덤핑·상계관세(2012·201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ivot to Asia(2011): 아·태 재균형 전략</li> <li>중국을 제외한 TPP 협상(비준 실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RRA(2009): 미국 우선 구매 적용 대상 확대</li> <li>청정에너지 보조금 투자 시작</li> </ul>

시대	무역정책	대외관계·외교	산업·투자 정책
트럼프 1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PP 탈퇴(2017)</li> <li>301조 대중 관세: 약 3,700억 달러 규모, 최대 25%</li> <li>232조 관세: 철강 25%, 알루미늄 10%</li> <li>USMCA(2020): NAFTA 재협상</li> <li>미중 1단계 합의(20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erica First' 공식화: 양자주의·동맹 비용 청구</li> <li>WTO 상소기구 임명 거부: 2019년 기능 정지</li> <li>파리협정 탈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CJA(2017): 법인세 35% → 21%, 국제조세법을 포함해 다국적기업의 미국 내 잔류 유도</li> <li>무역정책을 제조업 리쇼어링과 명시적 연계</li> </ul>
바이든 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트럼프 1기 대중 관세 대부분 유지</li> <li>중국산 전략물자 추가 관세 부과(202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맹 협력 복원: G7, 쿼드, AUKUS 강화</li> <li>IPEF가 출범하며 규칙 기반 국제질서 복원 강조</li> <li>대중 전략경쟁 공식화: 중국 배제 공급망 재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IJA(2021): 대규모 인프라 현대화·BABA 조항 포함</li> <li>CHIPS Act(2022):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위한 보조금·세액공제</li> <li>IRA(2022):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예산의 미국산 제조 기반 육성 추진</li> </ul>
트럼프 2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EEPA 펜타닐, 국가별 상호관세(2025): 위헌(2026. 2.) → 122조 임시 전환 및 301조 조사 개시</li> <li>대중 관세 145%까지 인상(tit-for-tat 대응)</li> <li>품목별 232조 관세: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부품·구리·목재·의약품 등에 부과</li> <li>관세 협상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대미 투자 약속 및 공급망 재편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를 통한 교역국과의 협상 강화: FDI 유치</li> <li>WTO MFN 원칙 위반 명시적 이탈</li> <li>국제기구 재정 기여 축소</li> <li>트럼프 코롤러리(2025): 그린란드 구입 시도, 파나마 운하 통제권 개입,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압송 등 서반구 내 영향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BDDA(2025): TCJA 영구화, IRA 청정에너지 보조금 철회, 신규 공장 즉시 공제, 미국산 신차 이자공제 등</li> <li>에너지: 화석연료 채굴 장려, LNG 신속 허가</li> <li>핵심광물: 232조 조사, 자국 생산 강화</li> <li>반도체: 관세 25%, 미국 우선 AI 칩 공급, 첨단제조 투자 세액공제 35%로 상향하여 국내 유인 강화</li> <li>조선: 범부처 계획 발표, 조선 금융 인센티브 입법 지시</li> <li>의약품: 관세 최대 100%, FDA 해외시설 규제 강화</li> <li>원자로: 대출 우선 배정, 핵연료 공급망 국내화, 미국산 원자로 수출 허가 심사 신속화 지시</li> </ul>

자료: 본 기초자료 내용을 종합하여 저자 작성

### 3. 주요국의 대응 사례

#### 가. 1930년대: 교역국의 보복관세 및 경제 블록화

-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촉발된 보호무역 확산은 각국의 보복 조치와 경제 블록화를 초래함.<sup>97)</sup>
  -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행에 대응하여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은 대미국 관세 인상, 수입 할당(quota) 사용 확대, 외환 통제 양자 협정 등을 통한 보복 조치를 취하였으며, 경제 블록화 현상이 일어남.<sup>98)</sup>
    - 캐나다는 미국 농산물 및 제조업 제품에 관세 인상 및 차별 조치로 대응했고, 영국과 무역을 확대함.
    - 프랑스는 관세 인상 및 쿼터제 사용을 확대하며 보호주의를 강화함.
    - 이탈리아, 독일 등은 관세 인상도 했지만 외환 통제 및 정치적 동맹 기반의 무역을 활성화하여 미국과의 무역을 축소함.
    - 영국은 초기에는 자유무역을 유지했으나 1932년 오타와 회의 이후 영연방 특혜 관세(Imperial Preference)를 도입하여 영연방 국가 간 낮은 관세를 허용하여 미국 제품을 차별함.
    - 1929년부터 1934년 사이 세계 무역량은 66% 급감했고, 미국의 수출은 61% 감소함.<sup>99)</sup>
  - 1920년대까지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개방적이었던 국제 무역 질서에 경제 블록화로 인해 차별적 무역체제가 형성됨.<sup>100)</sup>
    - 국가들은 제국·정치·통화 블록을 형성하고 배타적 경제권을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영국의 파운드블록, 프랑스의 금블록, 독일의 동유럽 경제권,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등이 형성되면서 세계경제는 분절화됨.
    - Kindleberger(1973)는 패권적 안정자(stablizer)의 부재로 각국이 자국 이익 보호에 몰두하면서 세계경제가 분절화되었음을 분석하고, 이러한 경제적 무질서가 1930년대 국제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궁극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의 경제적 배경(rearmament in a disintegrating world economy)이 되었다고 평가함.

97) Irwin(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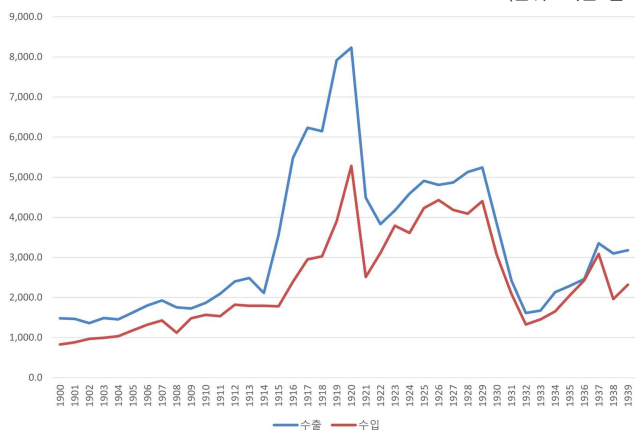
98) Kindleberger(1973),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99) Irwin(2011); Office of the Historian, U.S. Department of State, "Protectionism in the Interwar Period, 1921-1936"(검색일: 2026. 3. 24.).

100) Eichengreen and Irwin(1995), "Trade Blocs, Currency Blocs and the Reorientation of World Trade in the 1930s," pp. 1-24.

그림 4. 미국 연간 수출입 추이(1900~3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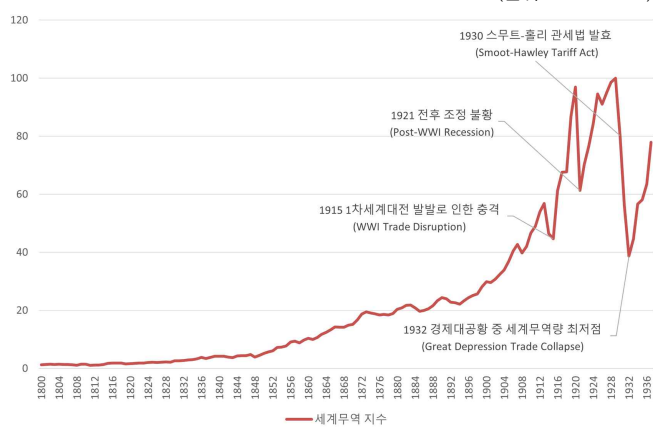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FRED(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검색일: 2026. 3. 18).

그림 5. 세계무역량 지수 추이(1800~1937년)

(단위: 1929=100)



자료: Federico-Tena World Trade Historical Database(검색일: 2026. 3. 23).

## 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자율성 추구

■ 전후 유럽은 마셜플랜과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하며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었으나, 점차 경제 통합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통해 미국 중심의 질서 내에서 독자적 입지를 구축하고자 함.

- 미국은 전후 무너진 유럽 국가들의 재건을 지원했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함.<sup>101)</sup>
-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결성의 주된 목적은 프랑스와 독일 간 갈등 관리를 위한 경제통합을 통한 상호의존적 구조 형성이 핵심이었으나,<sup>102)</sup>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 중심의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유럽의 독자적 경제 영향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sup>103)</sup>
  - 프랑스의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은 '유럽인의 유럽'을 내세우며 미국 주도의 전략적 종속에서 벗어나고자 1966년 NATO 통합 군사지휘체계에서 프랑스를 이탈시켰으며,<sup>104)</sup> 브레튼우즈 체제 아래 달러의 특권적 지위를 비판하며 프랑스가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통해 미국의 달러 패권에 압박을 가함.<sup>105)</sup>
- 서독은 동방정책(Ostpolitik)을 추진하며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련·동유럽과의 경제협력을 확대<sup>106)</sup>
-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 추구는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마찰을 초래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이라는 독자적 경제·정치 블록 형성의 토대가 됨.

101) Hogan(1987), *The Marshall Plan: America, Britain, and the Reconstruction of Western Europe, 1947-1952*.

102) European Parliament(2025. 11.), "The First Treaties"(검색일: 2026. 4. 3.).

103) Milward(1992), *The European Rescue of the Nation-State*.

104) SHAPE(NATO) 홈페이지, "1966-1967: SHAPE Finds a New Home"(검색일: 2026. 4. 3.).

105) Lundestad(2003),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Since 1945*.106) Sarotte(2001), *Dealing with the Devil: East Germany, Détente, and Ostpolitik, 1969-1973*.

## 다. 1970~80년대: 통상압력 속 일본의 대응 전략

■ 미국은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은 자발적 수출규제 수용, 산업 고도화, 현지 생산 확대, 플라자 합의 수용 등 일련의 대응을 통해 미·일 무역 마찰을 관리하고자 함.

- 일본은 자발적 수출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로 대미 수출 물량을 제한하되, 같은 수량을 수출 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전환함.
  - 일본은 1981년 5월 미국 자동차 수출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VER을 도입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연장하였는데 이는 표면상 일본의 자발적 조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레이건 행정부가 의회의 강경한 수입규제 입법 움직임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정부를 압박한 결과였음.<sup>107)</sup>
  - 1981년 5월 일본은 대미 자동차 수출을 연간 168만 대로 제한하는 VER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일본 자동차 업체는 렉서스(도요타), 아큐라(혼다), 인피니티(닛산) 등 고급화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보전<sup>108)</sup>
- 일본 자동차 업체는 1980년대에 미국 내 생산기지를 설립함으로써 무역 마찰을 우회함.<sup>109)</sup>
- 일본은 1985년 9월 22일 미국 주도로 G5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인위적으로 달러화 평가절하와 엔화·마르크화 절상에 합의하는 ‘플라자 합의’를 수용해 엔화 절상을 감내함.<sup>110)</sup>
  - 플라자 합의 수용은 단기적으로 미·일 무역 마찰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었으나 엔화가 급등하자 일본이 수출 타격을 우려하고 대응한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거품 형성으로 이어져 1990년대 장기 경기침체의 구조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적 부작용이 컸다는 평가가 있음.<sup>111)</sup>

## 라. 1990년대: 중국의 전략적 인내

■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 진압 이후 미국의 경제제재와 MFN 박탈 위협<sup>112)</sup>에 직면한 덩샤오핑은 도광양晦(韜光養晦)<sup>113)</sup> 기조하에 대외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노선을 유지함.<sup>114)</sup>

- 중국은 탈냉전 초기의 위기 속에서 미국 주도의 질서에 편입하되 국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성장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며 미국 자본 및 기술 유입을 적극 수용함.<sup>115)</sup>
-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중국은 시장 개방 확대 및 무역 규범 정비에 관한 광범위한 약속을 함.<sup>116)</sup>

107) Cohen(1984), “The Route to Japan’s Voluntary Export Restraints on Automobiles: An Analysis of the U.S.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 in 1981”(검색일: 2026. 4. 3.).

108) Feenstra(1988), “Quality Change Under Trade Restraints in Japanese Autos,” pp. 131-146.

109) Jozuka(2019. 6. 26.), “How US-made Japanese autos became an American success story”(검색일: 2026. 4. 3.).

110) Funabashi(1988).

111) Okina, Shirakawa, and Shiratsuka(2001. 2.), “The Asset Price Bubble and Monetary Policy: Japan’s Experience in the Late 1980s and the Lessons.”

112) Sutter(2016. 8. 22.), “China: Economic Sanctions”(검색일: 2026. 4. 3.).

113) 실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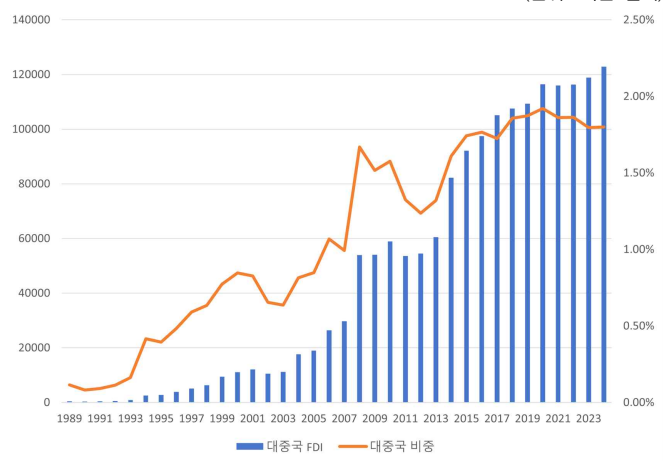
114) Deng(2008), *China’s Struggle for Status: The Realign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115) Hanemann, Rosen, and Gao(2016. 11.), “Two-Way Street: 25 Years of U.S.-China Direct Investment.”

- WTO 가입 이후에도 중국은 산업정책·국유기업 보조금·기술이전 요구 등 시장 왜곡적 관행을 지속하였다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며, Wu(2016)는 WTO 규범 체계 자체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체제(국유기업, 민간기업, 금융, 산업정책 전반을 통제하는 구조)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sup>117)</sup>
- 중국은 대외적 마찰을 관리하는 동시에 제조업 고도화·기술 자립 역량 강화를 병행(저자세·발전우선) 추진하였으며, WTO 가입 약 20년 후인 2010년대에 중국은 GDP 기준 세계 2위 경제 규모로 부상함.<sup>118)</sup>
- 이러한 성장이 시장 왜곡적 수단에 의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국 간 해석이 상이하나 WTO 가입과 9·11 테러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압박이 증등으로 분산되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 부담 속에서 국제 영향력 확대, 경제성장, 기술 발전, 군사 현대화 등 종합적인 국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보는 시선 존재<sup>119)</sup>

그림 6.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FDI) 추이(1989~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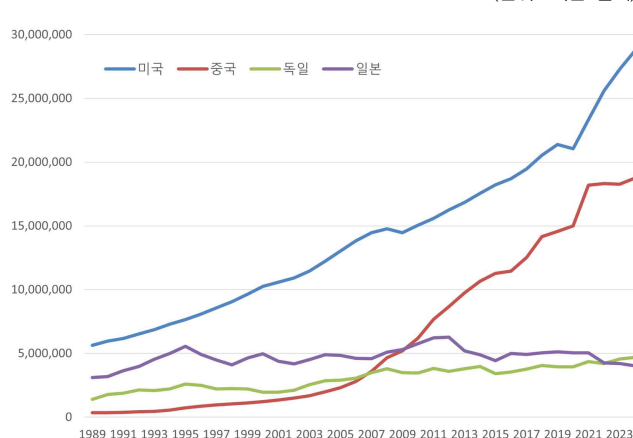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EA, Direct Investment by Country(검색일: 2026. 4. 3.).

그림 7. 주요국의 GDP 추이(1989~2024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2026. 4. 3.).

## 마. 트럼프 행정부 시기 각국의 차별화된 대응

### ■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상이함.

- 유럽연합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도 협상을 병행했고 그 결과 자동차 관세 부과는 협상 국면에서 보류됨.<sup>120)</sup>
- 캐나다, 멕시코는 보복관세로 대응했으나 NAFTA 재협상을 통해 USMCA로 전환함.<sup>121)</sup>
  - 캐나다는 NAFTA 협상 당시 제외해 왔던 유제품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관세율할당(TRQ) 방식의 시장 접근을 허

116) U.S. Department of State(2000. 5. 24.), "China: WTO Accession and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검색일: 2026. 4. 3.).

117) Wu(2016), "The 'China, Inc.' Challenge to Global Trade Governance," pp. 261-324.

118) Naughton(2007), *The Chinese Economy: Transitions and Growth*.

119) Song(2022), "Seizing the Window of Strategic Opportunity: A Study of China's Macro-Strategic Narrative since the 21st Century."

120) The White House(2018. 7. 25.), "Remarks by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Juncker of the European Commission in Joint Press Statements"(검색일: 2026. 4. 3.); Bown and Kolb(2021).

121) Villarreal(2024 업데이트),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검색일: 2026. 4. 3.).

용하고, 자국 낙농 산업 보호를 위해 운용해 온 유제품 가격제도를 폐지<sup>122)</sup>

- 멕시코는 자동차 역내 부가가치 기준 상향(75%까지)과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 공장 의무 비율 신설 등 노동·원산지 조건 강화를 수용
- 양국 모두 무관세 기초, 분쟁 해결 패널 유지,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획득

- 중국은 보복관세와 희토류 수출제한 카드를 활용하며 정면 대응함.<sup>123)</sup>

- 보복관세의 경우 2018년 미국 농산물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표적화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희토류 수출제한은 트럼프 1기 당시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시진핑의 희토류 시설 방문과 관영 매체의 경고 발언 등 압박 신호로 활용되어 미국 내 공급망 취약성 논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됨.
- 이후 무역 협상이 진행되면서도 상호 고율 관세의 구조가 사실상 고착화되었으며, 미국은 중국 수입을 줄였지만 중국 수입품이 제3국을 통해 우회 유입되는 비중이 증가함.<sup>124)</sup>

■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대한 교역국들의 대응은 크게 즉각 보복, 전략적 협상 수용, 다변화 등의 방식으로 나뉨.

- 캐나다는 펜타닐 관세 명분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관세를 즉각 부과하고 추가 1,2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2차 보복을 예고하는 등 가장 강경한 보복 입장을 취함.<sup>125)</sup>
  -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미국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서비스세(DST) 철회 등 유화 조치를 병행하며 협상 재개를 시도하였으나, 그 외에도 미국이 불만을 가진 캐나다의 낙농 보호정책(고관세, 쿼터), 철강 및 알루미늄의 산업정책에 대해 갈등이 남아 있어 향후 USMCA 재검토 기간에 재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sup>126)</sup>
  - 카니 총리는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유사한 가치와 이해를 공유(like-minded)하는 중견국(middle powers)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중심의 일방적 통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 강화를 촉구함.<sup>127)</sup>
-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단계별로 맞대응하여 최종 125%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희토류, 자석류 수출통제라는 비관세 전략 카드를 활용했으며, 이는 전 세계 자동차·반도체·방산 공급망에 실질적 충격을 가함으로써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함.<sup>128)</sup>
- EU는 즉각적 보복 대신 항공기·자동차·의료기기 등 미국산 수입품 950억 유로 규모에 대한 보복관세 검토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면서 실제 부과는 유보하는 위협을 통한 협상을 구사함.<sup>129)</sup>
  - 2025년 8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관세율 인하 대신 6,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7,500억 달러 규모의 구매를 약속
- 일본은 일곱 번의 라운드 협상을 통해 LNG, 농산물 구매 확대 패키지를 제시하고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함.<sup>130)</sup>

122) USTR(2018), "Agriculture: Market Access and Dairy Outcomes of the USMC Agreement"(검색일: 2026. 4. 3.).

123) NBER(2019. 3.), "The Impact of the 2018 Trade War on U.S. Prices and Welfare"(검색일: 2026. 4. 3.).

124) Haberkorn *et al.*(2024. 4. 12.), "Global Trade Patterns in the Wake of the 2018-2019 U.S.-China Tariff Hikes"(검색일: 2026. 4. 3.).

125) Department of Finance Canada(2025. 3. 4.), "Canada announces robust tariff package in response to unjustified U.S. tariffs"(검색일: 2026. 4. 3.).

126) Kitamura(2025), "US-Canada Trade Relations." CRS In Focus, IF12595. Updated December 5, 2025(검색일: 2026. 4. 3.).

127) "Squeezed by U.S. and China, the World's Middle Powers Are Teaming Up"(2026b. 2. 7.), (검색일: 2026. 4. 3.).

128) Baskaran and Schwartz(2025. 10. 14.), "China's New Rare Earth and Magnet Restrictions Threaten U.S. Defense Supply Chains"(검색일: 2026. 4. 3.).

129) CRS(2025b. 9. 18.), "U.S.-EU Tariffs and Trade Framework Agreement," CRS In Focus, IF13107(검색일: 2026. 4. 3.).

- 일본과는 2025년 7월 23일 합의를 발표하였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포함한 상호 관세를 15% 낮추고 투자 및 대출은 \$5,500억 규모, 쌀 수입 쿼터 확대, 연간 \$80억 규모의 농산물 구매, 방위비 증액을 약속
- 베트남은 미국산 일부 품목에 대해 0%로 낮추는 시장 개방을 수용하는 대신 46%에 달하던 상호 관세를 20%로 낮추었으나 관세 회피 목적의 우회 수출로 판정된 물품에 대한 40% 환적 관세라는 새로운 위협 요소가 추가됨.<sup>131)</sup>
- 멕시코는 캐나다와의 대미 관세 갈등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보복 자제와 실용적 협력이라는 냉정한 대응 (cool-headed) 전략을 통해 USMCA 준수 품목의 관세 면제를 유지함.
- 이를 통해 멕시코는 아시아에서 미국시장으로 수출하던 다국적 기업들이 멕시코 내 생산기지 구축 및 확장을 가속화하는 니어쇼어링 흐름이 강화되면서 트럼프 2기 광범위한 관세 전쟁의 실질적 수혜국으로 평가됨.<sup>132)</sup>
- 아르헨티나·에콰도르·엘살바도르·과테말라 등 중남미 4개국은 2025년 11월 13일 일괄 프레임워크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미국이 생산하지 않는 품목(바나나, 코코아, 커피 등 열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대신 지식재산권 강화, 디지털 무역 보호, 공급망 안보 공조 등 비관세 의무를 수용함.<sup>133)</sup>
- 이 합의는 미국의 서반구 내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확장 중인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국가들을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적 의도 반영

## 4. 평가

■ 미국의 역사적 자국우선주의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한 자국우선주의 정책 간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함.

- 미국의 역사적 자국우선주의와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나타난 정책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위기 시 보호무역주의 재부상, 대통령 행정권을 통한 의회 우회, 산업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 등의 유사점이 있음.
- [위기 시 보호무역주의 재부상] 미국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 무역적자 확대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보호무역(포드니-맥컴버(1922), 스무트-홀리(1930), 닉슨 쇼크(1971), 레이건 시기 일본 VER(1981), 트럼프 정부의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에 의존
- [의회 우회] 「무역확장법」 232조(1962), 「무역법」 301조(1974), IEEPA(1977)로 이어지는 입법을 통해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법 활용은 정점에 해당
- [산업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 후버 행정부의 「스무트-홀리 관세법」(농업 로비), 레이건 시기 일본 자동차 VER(자동차 산업 로비), 트럼프 정부의 품목별 관세(철강·자동차 산업 로비) 등 특정 산업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이 정책 방향을 결정지은 대표적 사례

130) CRS(2025a. 9. 17.), "U.S. Tariffs and the 2025 U.S.-Japan Framework Agreement," CRS In Focus, IN12608(검색일: 2026. 4. 3.).

131) USTR(2025. 10.),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Viet Nam Reach a Framework for an 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검색일: 2026. 4. 3.).

132) Wall Street Journal(2025. 12. 29.), "The Unexpected Winner of Rising American Tariffs Is Mexico"(검색일: 2026. 4. 3.).

133) Clark Hill PLC(2025. 11. 18.), "U.S. Strikes New Trade Frameworks with Argentina, Ecuador, Guatemala & El Salvador — Targeted Tariff Relief and Strategic Signals for the Hemisphere"(검색일: 2026. 4. 3.).

-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는 다자무역체제로부터 명시적 이탈, 안보·국경 정책의 통합, 관세 활용 범위, 동일한 정책이라도 관점에 따라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이성을 나타냄.
  - [다자무역체제 이탈] 과거 미국은 GATT/WTO 체제 내에서 예외 조항을 원용하는 방식으로 보호무역을 정당화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WTO 재정 기여 축소, MFN 원칙 위반, 상소기구 무력화(2019년 12월부터 기능 정지) 등 WTO 체제에서 명시적으로 이탈하여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동맹국에도 상호 관세를 부과하여 특혜적 시장 접근 원칙을 훼손
  - [안보·국경 정책 통합] 과거 미국 대통령 중에 안보·국경·무역 정책을 단일 관세 수단으로 통합한 전례가 없었으나,<sup>134)</sup> 트럼프 행정부는 펜타닐과 불법 이민을 IEEPA 비상사태로 선포하여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무역과 안보·국경 정책을 통합하여 추진
  - [관세 활용 범위] 역사적으로 관세는 산업 보호 또는 불공정 무역 시정이라는 목적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트럼프 2기는 관세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레버리지로 활용
  - [관점 차이] 반도체 공급망 안보를 위한 조치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AI 확산 규제(AI Diffusion Rule)가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차단에 초점을 맞춘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AI 칩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설계 (GAIN AI Act)

####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지님.<sup>135)</sup>

-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대중 기술·안보 견제, 제조업 리쇼어링, 무역 불평등 시정 등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공고화하고 주요 동맹국과의 관세 협상을 레버리지로 하여 단기간에 무역 합의를 이끌어냄.
  - 트럼프 1기 이후 대중 견제 및 전략 산업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자국우선주의 통상 기조는 미국 정치 전반의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함.
  - 영국, EU, 일본, 한국 등을 대상으로 대미 투자 약속을 얻어내고 반도체, 조선, 희토류 등 전략 분야의 공급망 리쇼어링 논의를 가속화함.
-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법적 안정성 저해, 동맹 신뢰 손상, 소비자·기업 비용 증가, 투자 약속의 실효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한계로 나타남.
  -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라는 경제적 목적을 국가비상사태로 확장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연방 대법원은 IEEPA에 관세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행정조치가 법률상 권한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
  - 캐나다, EU, 일본, 한국 등 기존 동맹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전제해 온 동맹 우대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로 단기적 협상 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 동맹 신뢰성을 저해
  - Yale Budget Lab은 2025년 상반기 내구재 관세의 소비자 가격 전가율이 61~80%에 달한다고 분석하였고,<sup>136)</sup>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관세 비용의 90%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고 평가<sup>137)</sup>
  - 교역국과의 무역 프레임워크 합의는 이행 메커니즘이 부재한 채 정치적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효과가 불확실

134) CNBC(2025. 2. 5.), "How Smoot-Hawley Tariff Sparked the 'Mother of All Trade Wars'"(검색일: 2026. 4. 3.).

135) Kolb *et al.*(2026. 1. 12.), "Presidential 2025 Tariff Actions: Timeline and Status"(검색일: 2026. 4. 3.).

136) The Budget Lab at Yale(2025. 9. 2.), "Short-Run Effect of 2025 Tariffs So Far"(검색일: 2026. 4. 3.).

137) Amity *et al.*(2026. 2. 12.), "Who Is Paying for the 2025 U.S. Tariffs?"(검색일: 2026. 4. 3.).

- 트럼프 2기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인지 특정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일시적 이탈인지는 아직 진행형으로 알 수 없으나 향후 USMCA 재검토, 미중 무역 협상의 방향, WTO 체제의 재건 여부 등이 그 평가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KIEP**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강구상, 김혁중, 김종혁, 권혁주, 박은빈. 2025.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기조 전망』. 연구보고서 25-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백창제. 2015. 『미국 무역정책 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 [영문자료]

- Autor, David H., David Dorn, and Gordon H. Hanson. 2016. "The China Shock: Learning from Labor Market Adjustment to Large Changes in Trade." *Annual Review of Economics*, 8.
- Bown, Chad P. 2007. "China's WTO Entry: Antidumping, Safeguards, and Dispute Settlement." NBER Working Paper No. 1334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_\_\_\_\_. 2021. "The US-China Trade War and Phase One Agreement." *Journal of Policy Modeling*, 43(4).
- Cinelli, G. M., K. J. Nunnenkamp, C. A. Valenstein, U. R. Pin, and R. P. Goldfin. 2020. CFIUS issues final regulations under FIRRMA. Lexology. (January 13)
- Dallek, Robert. 1995. *Franklin D. Roosevelt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32-1945*.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 Deng, Yong. 2008. *China's Struggle for Status: The Realign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stler, Ian M. 2005. *American Trade Politics*. 4th ed.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Eichengreen, Barry. 1989.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oot-Hawley Tariff." *Research in Economic History*, 12.
- Eichengreen, Barry and Douglas A. Irwin. 1995. "Trade Blocs, Currency Blocs and the Reorientation of World Trade in the 1930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8(1-2).
- Feenstra, Robert C. 1988. "Quality Change Under Trade Restraints in Japanese Auto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3(1).
- Fernández, Rodrigo *et al.* 2023.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ndustrial Policy for the Energy Transi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47(6).
- Funabashi, Yoichi. 1988. *Managing the Dollar: From the Plaza to the Louvr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Hamilton, Alexander. 1791. *Report on Manufactures*. In *The Papers of Alexander Hamilton*, Vol. 10. edited by Harold C. Syrett.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nemann, T., D. H. Rosen, and C. Gao. 2016. "Two-Way Street: 25 Years of U.S.-China Direct Investment." (November)

- Harding, Harry. 1990. "The Impact of Tiananmen on China's Foreign Policy." NBR Analysis, 1(3).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 Healy, David. 1988. *Drive to Hegemony: The United States in the Caribbean, 1898-1917*.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Hogan, Michael J. 1987. *The Marshall Plan: America, Britain, and the Reconstruction of Western Europe, 1947-1952*.
- Hufbauer, Hogan, Jung. 2018. "Section 232 Investigations: The Key to Steel and Aluminum Tariffs." PIIE Policy Brief No. 18-13.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Ikenberry, G. John. 2001.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kenson, Daniel J. 1988. "The Reagan Record on Trade: Rhetoric vs. Reality." Cato Institute Policy Analysis No. 107.
- Irwin, Douglas A. 2011. *Peddling Protectionism: Smoot-Hawley and the Great Depress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17. *Clashing over Commerce: A History of US Trade Poli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ndleberger, Charles P. 1973.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olko, Gabriel. 1972. *The Limits of Power: The World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1945-1954*. Harper & Row.
- LaFeber, Walter. 1963. *The New Empire: An Interpretation of American Expansion, 1860-1898*. Cornell University Press.
- Lundestad, Geir. 2003.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Since 1945*. Oxford University Press.
- Milward, Alan S. 1992. *The European Rescue of the Nation-State*. Routledge.
- Naughton, Barry. 2007. *The Chinese Economy: Transitions and Growth*. MIT Press.
- Okina, Kunio, Masaaki Shirakawa, and Shigenori Shiratsuka. 2001. "The Asset Price Bubble and Monetary Policy: Japan's Experience in the Late 1980s and the Lessons." *Monetary and Economic Studies*, IMES, Bank of Japan. (February)
- Reitano, Joanne. 1994. *The Tariff Question in the Gilded Age: The Great Debate of 1888*.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Rodrik, Dani. 2011. *The Globalization Paradox: Democracy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W. W. Norton & Company.
- \_\_\_\_\_. 2018. "Populism and the Economics of Globaliz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Policy*, 1(1-2).
- \_\_\_\_\_. 2021. "Why Does Globalization Fuel Populism? Economics, Culture, and the Rise of Right-Wing Populism." *Annual Review of Economics*, 13.
- Rosenberg, Emily S. 1982. *Spreading the American Dream: American Economic and Cultural Expansion, 1890-1945*. Hill and Wang.
- \_\_\_\_\_. 1999. *Financial Missionaries to the World: The Politics and Culture of Dollar Diplomacy, 1900-1930*. Duke University Press.

- Sarotte, Mary Elise. 2001. *Dealing with the Devil: East Germany, Détente, and Ostpolitik, 1969-1973*.
- Shambaugh, David. 2025. *Breaking the Engagement: How China Won & Lost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 Song, Wenlong. 2022. "Seizing the Window of Strategic Opportunity: A Study of China's Macro-Strategic Narrative since the 21st Century." *Social Sciences*, 11.
- Stevens, Edward J. 2002. "The Tariff Debates of 1841 and 1842." *Essays in Economic & Business History*, 20.
- Tarbert, Heath P. 2020. "Modernizing CFIUS." *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88(6).
- Taussig, Frank W. 1931. *The Tariff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8th ed. Wu, Mark. 2016. "The 'China, Inc.' Challenge to Global Trade Governance."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57(2).
- Zeiler, Thomas W. 1999. *Free Trade, Free World: The Advent of GATT*. UNC Press.
- Zimmermann, Warren. 2002. *First Great Triumph: How Five Americans Made Their Country a World Power*. Farrar, Straus and Giroux.

## [온라인 자료]

- Amadeo, Kimberly and Justin McBride. 2018. "The Risks of U.S. Steel and Aluminum Tariff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rch 8). <https://www.cfr.org/backgrounders/risks-us-steel-and-aluminum-tariffs>(검색일: 2026. 4. 3.).
- Amiti, Mary, Chris Flanagan, Sebastian Heise, and David E. Weinstein. 2026. "Who Is Paying for the 2025 U.S. Tariffs?" Liberty Street Economics.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February 12). <https://libertystreeteconomics.newyorkfed.org/2026/02/who-is-paying-for-the-2025-u-s-tariffs/>(검색일: 2026. 4. 3.).
- Associated Press. 2026. "NATO Launches Arctic Sentry Military Effort in Seeking to Move on from Greenland Dispute." *AP News*. (February 11). <https://apnews.com/article/nato-arctic-sentry-greenland-trump-exercises-defense-35855929d7709c60e1192bb6778df712>(검색일: 2026. 4. 3.).
- Baskaran, Gracelin and Meredith Schwartz. 2025. "China's New Rare Earth and Magnet Restrictions Threaten U.S. Defense Supply Chains." CSIS Critical Question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October 14). <https://www.csis.org/analysis/chinas-new-rare-earth-and-magnet-restrictions-threaten-us-defense-supply-chains>(검색일: 2026. 4. 3.).
- Biden White House Archive. "Executive Order 14083." <https://buly.kr/APwmN7O>(검색일: 2026. 4. 3.).
- \_\_\_\_\_.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검색일: 2026. 4. 3.).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h10/>(검색일: 2026. 3. 23.).
- Borkovic, McKenzie, Egan, McCarthy and Ruggiero. 2021. "BIS Has New Authorities to Impose Controls over Activities of U.S. Persons in Support of Foreign Military, Security, or Intelligence Services." Akin Gump. <https://www.akingump.com/en/insights/alerts/bis-has-new-authorities-to-impose-controls-over-activities-of-us-persons-in-support-of-foreign-military-security-or-intelligence-services>(검색일: 2026. 4. 2.).
- Bown, Chad P. and Melina Kolb. 2021. "Trade Protection Along Supply Chains.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 <https://cep.lse.ac.uk/pubs/download/dp1739.pdf>(검색일: 2026. 4. 3.).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1960–present." <https://www.bea.gov/data/intl-trade-investment/international-trade-goods-and-services>(검색일: 2026. 3. 24.).
- \_\_\_\_\_. "Direct Investment by Country." <https://www.bea.gov/international/di1usdbal>(검색일: 2026. 4. 3.).
- Bush, Richard C. 2019. "30 Years after Tiananmen Square: A Look Back on Congress' Forceful Response." Brookings. <https://www.brookings.edu/articles/30-years-after-tiananmen-square-a-look-back-on-congress-forceful-response/>(검색일: 2026. 4. 3.).
- Cha, Victor and Myra Zhang. 2018. "KORUS Revision: Not the Worst Outcom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https://www.csis.org/analysis/korus-revision-not-worst-outcome>(검색일: 2026. 4. 3.).
- Clark Hill PLC. 2025. "U.S. Strikes New Trade Frameworks with Argentina, Ecuador, Guatemala & El Salvador—Targeted Tariff Relief and Strategic Signals for the Hemisphere." (November 18). <https://www.clarkhill.com/news-events/news/u-s-stikes-new-trade-frameworks-with-argentina-ecuador-guatemala-el-salvador-targeted-tariff-relief-and-strategic-signals-for-the-hemisphere/>(검색일: 2026. 4. 3.).
- Clinton, William J. 1993. "Executive Order 12850: Conditions for Renewal of Most-Favored-Nation Status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94."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May 28). <https://www.presidency.ucsb.edu>(검색일: 2026. 4. 3.).
- CNBC. 2025. "How Smoot-Hawley Tariff Sparked the 'Mother of All Trade Wars'." (February 5). <https://www.cnn.com/2025/02/05/how-smoot-hawley-tariff-sparked-the-mother-of-all-trade-wars.html>(검색일: 2026. 4. 3.).
- Cohen, Stephen D. 1984. "The Route to Japan's Voluntary Export Restraints on Automobiles: An Analysis of the U.S.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 in 1981." Working Paper No. 20. <https://nsarchive2.gwu.edu/japan/scohenwp.htm>(검색일: 2026. 4. 3.).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Origin, Evolution, and Use." CRS Report No. R46604. (December 14). <https://www.everycrsreport.com/reports/R46604.html>(검색일: 2026. 4. 3.).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0. "Teaching Notes for Isolationism." (October 29). <https://www.cfr.org/article/s/isolationism-2>(검색일: 2026. 3. 24.).
- CRS. 2025a. "U.S. Tariffs and the 2025 U.S.-Japan Framework Agreement." CRS In Focus, IN12608. (September 17). [https://www.congress.gov/crs\\_external\\_products/IN/PDF/IN12608/IN12608.2.pdf](https://www.congress.gov/crs_external_products/IN/PDF/IN12608/IN12608.2.pdf)(검색일: 2026. 4. 3.).
- \_\_\_\_\_. 2025b. "U.S.-EU Tariffs and Trade Framework Agreement." CRS In Focus, IF13107. (September 18).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3107>(검색일: 2026. 4. 3.).
- Darby, Marta. 2014. "U.S.-China Solar Trade War: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2012 and 2014 Antidumping Disputes." Master's Project, Duke University. <https://dukespace.lib.duke.edu/items/8ce37407-8fe5-4a79-942e-7f918d0873af>(검색일: 2026. 4. 3.).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025. "Canada Announces Robust Tariff Package in Response to Unjustified U.S. Tariffs." Government of Canada. (March 4).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5/03/canada-announces-robust-tariff-package-in-response-to-unjustified-us-tariffs.html>(검색일: 2026. 4. 3.).
- Elsea, Jennifer K. 2012. "Chinese Tire Imports: Section 421 Safeguards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CRS Report R40844. <https://www.everycrsreport.com/reports/R40844.html>(검색일: 2026. 4. 3.).

- European Parliament. 2025. "The First Treaties." (November). <https://www.europarl.europa.eu/factsheets/en/sheet/1/the-first-treaties>(검색일: 2026. 4. 3.).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2024. "Customs Duties: What Do They Amount To?" FRED Blog. (September). <https://fredblog.stlouisfed.org/2024/09/customs-duties-what-do-they-amount-to/>(검색일: 2026. 3. 24.).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FRED Economic Data." <https://fred.stlouisfed.org/series/M07023USM144NNBR>(검색일: 2026. 3. 18.).
- Federico-Tena World Trade Historical Database. <https://www.uc3m.es/ss/Satellite/UC3MInstitucional/es/TextoMixta/1371246237481/>(검색일: 2026. 3. 23.).
- Flacks, Marti and Madeleine Songy. 2022. "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Goes into Effec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une 27). <https://www.csis.org/analysis/uyghur-forced-labor-prevention-act-goes-effect>(검색일: 2026. 4. 3.).
- Friedberg, Aaron L. 2019. "Smart Competition: Adapting U.S. Strategy toward China at 40 Years."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https://www.nbr.org/publication/smart-competition-adapting-u-s-strategy-toward-china-at-40-years/>(검색일: 2026. 4. 3.).
- Goldberg, Jeffrey. 2016. "The Obama Doctrine." The Atlantic. (April). <https://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16/04/the-obama-doctrine/471525/>(검색일: 2026. 4. 3.).
- 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GFOA) 홈페이지.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https://www.gfoa.org/the-infrastructure-investment-and-jobs-act-iija-was>(검색일: 2026. 4. 3.).
- Haberkorn, F., T. T. Hoang, G. Lewis, C. Mix, and D. Moore. 2024. "Global Trade Patterns in the Wake of the 2018-2019 U.S.-China Tariff Hikes." FEDS Notes. Federal Reserve. (April 12). <https://www.federalreserve.gov/econres/notes/feds-notes/global-trade-patterns-in-the-wake-of-the-2018-2019-u-s-china-tariff-hikes-20240412.html>(검색일: 2026. 4. 3.).
- Heritage Foundation. 2010. "America's Founders and the Principles of Foreign Policy: Sovereign Independence, National Interests, and the Cause of Liberty in the World." (October 15). <https://www.heritage.org/political-process/report/americas-founders-and-the-principles-foreign-policy-sovereign-independence>(검색일: 2026. 3. 24.).
- Hufbauer, Gary Clyde. 2017. "'Buy American' Is Bad for Taxpayers and Worse for Exports." PIIE Trade and Investment Policy Watch. (May). <https://www.piie.com>(검색일: 2026. 4. 3.).
- Hufbauer, Gary Clyde and Megan Hogan. 2022. "CHIPS Act Will Spur US Production but Not Foreclose Chin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ctober). <https://www.piie.com/sites/default/files/2022-10/pb22-13.pdf>(검색일: 2026. 4. 3.).
- Hungerford, Thomas L. 2006. "U.S. Federal Government Revenues: 1790 to the Presen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s://www.everycrsreport.com/files/20060925\\_RL33665\\_4a8c6781ce519caa3e6b82f95c269f73021c5fdf.pdf](https://www.everycrsreport.com/files/20060925_RL33665_4a8c6781ce519caa3e6b82f95c269f73021c5fdf.pdf)(검색일: 2026. 3. 3.).
- INSS. 2025. "NATO Summit June 2025—A Victory for Trump and Security Challenges for Europe." (July 15). <https://www.inss.org.il/publication/nato-2025/>(검색일: 2026. 4. 3.).
- Jackson, James K. and D. Cimino-Isaacs. 2020. "CFIUS Reform under FIRRMA." CRS Report. (February 21). <https://www.congress.gov>(검색일: 2026. 4. 3.).
- Jozuka, Emiko. 2019. "How US-Made Japanese Autos Became an American Success Story." CNN Business.

- (June 26). <https://www.cnn.com/2019/06/26/business/japan-american-honda-hnk-intl/index.html>(검색일: 2026. 4. 3.).
- Juhász, Réka, Nathan Lane, and Dani Rodrik. 2023. "The New Economic of Industrial Policy" NBER Working Paper 31538. [https://www.nber.org/system/files/working\\_papers/w31538/w31538](https://www.nber.org/system/files/working_papers/w31538/w31538)(검색일: 2026. 4. 3.).
- Kitamura, Kyla H. 2025. "US-Canada Trade Relations." CRS In Focus, IF12595. (Updated December 5). [https://www.congress.gov/crs\\_external\\_products/IF/HTML/IF12595.web.html](https://www.congress.gov/crs_external_products/IF/HTML/IF12595.web.html)(검색일: 2026. 4. 3.).
- Kolb, Cimino-Isaacs, Jurenas, Willieams, Sutter. 2026. "Presidential 2025 Tariff Actions: Timeline and Status." CRS Report R48549. (January 12).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8549>(검색일: 2026. 4. 3.).
- National Archives. 1898. "Joint Resolution to Provide for Annexing the Hawaiian Islands to the United States." (July 7). <https://www.archives.gov/milestone-documents/joint-resolution-for-annexing-the-hawaiian-islands>(검색일: 2026. 3. 24.).
- \_\_\_\_\_. 2022. "Monroe Doctrine (1823)." (May 10). <https://www.archives.gov/milestone-documents/monroe-doctrine>(검색일: 2026. 3. 24.).
- \_\_\_\_\_. 2022. "Theodore Roosevelt's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 (1905)." (February 8). <https://www.archives.gov/milestone-documents/roosevelt-corollary>(검색일: 2026. 3. 24.).
- NBER. 2019. "The Impact of the 2018 Trade War on U.S. Prices and Welfare." (March). <https://www.nber.org/papers/w25672>(검색일: 2026. 4. 3.).
- Office of the Historian, U.S. Department of State 홈페이지. "Milestones in the History of U.S. Foreign Relations."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검색일: 2026. 4. 3.).
- Office of the Historian, U.S. Department of State. "Protectionism in the Interwar Period, 1921-1936."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921-1936/protectionism>(검색일: 2026. 3. 24.).
- \_\_\_\_\_. "Secretary of State John Hay and the Open Door Policy in China, 1899-1900." Milestones in the History of U.S. Foreign Relations.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899-1913/hay-and-china>(검색일: 2026. 3. 24.).
- \_\_\_\_\_. "Washington's Farewell Address."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784-1800/washington-farewell> (검색일: 2026. 3. 24.).
- SHAPE 홈페이지. "1966-1967: SHAPE Finds a New Home." <https://shape.nato.int/page1463252>(검색일: 2026. 4. 3.).
- Scowcroft, Brent. 2006. "China Conference Remarks."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Historian. <https://history.state.gov/conferences/2006-china-cold-war/scowcroft>(검색일: 2026. 4. 3.).
- Sutter, Karen M. 2016. "China: Economic Sanctions." CRS Report R44605. (August 22). <https://www.congress.gov> (검색일: 2026. 4. 3.).
- Tarbert, Heath P. 2020. "Modernizing CFIUS." 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88(6). <https://gwlr.org>(검색일: 2026. 4. 3.).
- Tax Foundation 홈페이지. "Tax Cuts and Jobs Act (TCJA)." <https://taxfoundation.org/taxedu/glossary/tax-cuts-and-jobs-act/>(검색일: 2026. 4. 3.).
-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May 28). <https://www.presidency.ucs>

- b.edu(검색일: 2026. 4. 3.).
- The Budget Lab at Yale. 2025a. “Where We Stand: The Fiscal, Economic, and Distributional Effects of All U.S. Tariffs Enacted in 2025 Through April 2.” (April 2). <https://budgetlab.yale.edu/research/where-we-stand-fiscal-economic-and-distributional-effects-all-us-tariffs-enacted-2025-through-april>(검색일: 2026. 4. 3.).
- \_\_\_\_\_. 2025b. “Short-Run Effects of 2025 Tariffs So Far.” (September 2). <https://budgetlab.yale.edu/research/short-run-effects-2025-tariffs-so-far>(검색일: 2026. 4. 3.).
- The Guardian. 2025. “Donald Trump and the Panama Canal: the Facts behind His China Claims.” (January 23).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jan/23/donald-trump-panama-canal-operation-china-claims-explainer>(검색일: 2026. 4. 22.).
- Thomson Reuters. 2025. “History of U.S. Tariffs and Why It Matters Today.” (May 15). <https://tax.thomsonreuters.com/blog/history-of-u-s-tariffs-and-why-it-matters-today/>(검색일: 2026. 3. 24.).
- Trachtenberg, Danielle M. 2026.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CRS Report IF11346.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1346>(검색일: 2026. 4. 3.).
- UC Santa Barbara 미국 대통령 문서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www.presidency.ucsb.edu>(검색일: 2026. 4. 3.).
- U.S. Congress. 2009. “H.R. 1: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https://www.congress.gov/bill/111th-congress/house-bill/1>(검색일: 2026. 4. 3.).
-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9. “Department of Commerce Announces the Addition of Huawei Technologies Co. Ltd. to the Entity List.” (May 15). <https://2017-2021.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19/05/department-commerce-announces-addition-huawei-technologies-co-ltd.html>(검색일: 2026. 4. 2.).
- U.S. Department of State. 2000. “China: WTO Accession and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May 24). [https://1997-2001.state.gov/regions/eap/fs-china\\_pntr-wto\\_000524.html](https://1997-2001.state.gov/regions/eap/fs-china_pntr-wto_000524.html)(검색일: 2026. 4. 3.).
- U.S.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홈페이지.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https://usgovernmentmanual.gov/Agency?EntityId=rWi3HGQrz10%3D&ParentEId=vnIUziVHXVU%3D&EType=/sbLHImeIYk%3D>(검색일: 2026. 4. 2.).
- U.S. Senate. 1832. “Classic Senate Speeches: Henry Clay, ‘In Defense of the American System’” (February 2). [https://www.senate.gov/artandhistory/history/common/generic/Speeches\\_ClayAmericanSystem.htm](https://www.senate.gov/artandhistory/history/common/generic/Speeches_ClayAmericanSystem.htm)(검색일: 2026. 3. 24.).
- USITC 홈페이지. <https://www.usitc.gov>(검색일: 2026. 4. 3.).
- USTR 홈페이지. <https://ustr.gov>(검색일: 2026. 4. 3.).
- USTR. 2018. “Agriculture: Market Access and Dairy Outcomes of the USMC Agreement.” USMCA Fact Sheet.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united-states-mexico-canada-agreement/fact-sheets/market-access-and-dairy-outcomes>(검색일: 2026. 4. 3.).
- \_\_\_\_\_. 2025.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Viet Nam Reach a Framework for an 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 (October).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2025/october/fact-sheet-united-states-and-viet-nam-reach-framework-agreement-reciprocal-fair-and-balanced-trade>(검색일: 2026. 4. 3.).
- \_\_\_\_\_. 2026. “From Hamilton to Today: Trade and U.S. Economic Strategy.” (January 20).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speeches-and-remarks/2026/hamilton-today-trade-and-us-economic-strate>

- gy(검색일: 2026. 4. 3.).
- \_\_\_\_\_. “Special 301 Reports, 1994-1996.” <https://ustr.gov/issue-areas/intellectual-property/special-301/previous-special-301-reports>(검색일: 2026. 4. 3.).
- Villarreal, M. Angeles and Ian F. Fergusson. 2024(업데이트).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CRS Report R44981.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4981>(검색일: 2026. 4. 3.).
- \_\_\_\_\_. 2023.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CRS Report R44981. (Updated September 29).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4981>(검색일: 2026. 4. 3.).
- Wall Street Journal. 2020. “Is TikTok Being Banned? U.S. Delays Plan to Block Downloads With Deal Reached.” (September 20). <https://www.wsj.com/articles/tiktok-being-banned-u-s-delays-plan-to-block-downloads-with-deal-reached-11600642531>(검색일: 2026. 4. 3.).
- \_\_\_\_\_. 2025. “The Unexpected Winner of Rising American Tariffs Is Mexico.” (December 29). <https://www.wsj.com/economy/trade/mexico-exports-us-trump-tariffs-e891510a>(검색일: 2026. 4. 3.).
- \_\_\_\_\_. 2026a. “Venezuela to Give U.S. Up to 50 Million Barrels of Oil, Trump Says.” (January 7). <https://www.wsj.com/politics/policy/venezuela-to-give-u-s-up-to-50-million-barrels-of-oil-trump-says-c964eb48>(검색일: 2026. 4. 3.).
- \_\_\_\_\_. 2026b. “Squeezed by U.S. and China, the World's Middle Powers Are Teaming Up.” (February 7). <https://www.wsj.com/world/europe/squeezed-by-u-s-and-china-the-worlds-middle-powers-are-teaming-up-77603dee>(검색일: 2026. 4. 3.).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26. 4. 3.).
- White House. 홈페이지. “Presidential Action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검색일: 2026. 4. 3.).
- \_\_\_\_\_. 2018. “Remarks by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Juncker of the European Commission in Joint Press Statements.” (July 25).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president-juncker-european-commission-joint-press-statements>(검색일: 2026. 4. 3.).
- \_\_\_\_\_. 2025a. “Restoring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War.” (September 5). <https://www.war.gov/News/News-Stories/Article/Article/4295826/trump-renames-dod-to-department-of-war/>(검색일: 2026. 4. 3.).
- \_\_\_\_\_. 2025b.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12/2025-National-Security-Strategy.pdf>(검색일: 2026. 4. 3.).
- Zable, Samuel. 2018.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Lawfare*. (August 2). <https://www.lawfaremedia.org/article/foreign-investment-risk-review-modernization-act-2018>(검색일: 2026. 4. 3.).
- Zoellick, Robert B. 2001. “Countering Terror with Trade.”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20). <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opinions/2001/09/20/countering-terror-with-trade/aa1e3f27-f069-4b66-b752-8d141876d0b7/>(검색일: 2026. 4. 3.).